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 박종철 · 전병곤 · 백우열 · 이상국 · 정주영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 박종철 · 전병곤 · 백우열 · 이상국 · 정주영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인 쇄 2013년 1월
발 행 2013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 S B N 978-89-8479-703-1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I. 서 론	1
II. 18차 당대회의 기조와 의미	9
1. 핵심기조에 대한 분석	11
2. 지도이념과 목표에 대한 분석	14
III. 중국 공산당 신지도부의 특징과 의미	23
1. 신지도부 구성 내용	25
2. 신지도부 인선과정과 구성의 특징	31
3. 신지도부 구성이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는 함의	37
IV. 18차 당대회의 정치·경제·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41
1.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44
2.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53
3.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59
4.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66
V. 18차 당대회의 대외·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71
1.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73
2.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84
3.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91



VI. 정책적 고려사항	95
1.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97
2. 한중 협력방안	105
참고문헌	11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9

표목차

Contents

〈표 Ⅲ-1〉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26
〈표 Ⅲ-2〉 18기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7인 제외)	27
〈표 Ⅲ-3〉 서기처 인사 내용	30
〈표 V-1〉 역대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과 대외정책기조	78
〈표 V-2〉 역대 당대회 업무보고에 나타난 주요 대상별 대외정책 방향	83
〈표 V-3〉 역대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방·건설의 목표·원칙·방향	89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신지도부 인사 결과와 18차 당대회 업무보고(十八大工作報告) 분석을 통해 중국 신지도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을 시도했다.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Ⅱ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18대의 기조와 의미 분석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국정철학(혹은 지도이념)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했다. 18대의 핵심 내용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의 견지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이었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사상, 그리고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 18대의 기조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회의 핵심 기조와 설정된 목표들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고 중대한 전환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Ⅲ장에서는 신지도부 인선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권력 승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신지도부는 시진핑이 당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넘겨받으면서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이루었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하면 모두 4.5세대인 인사들로 최고 의결집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리더십 전환기의 리스크가 경감되었고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원로의 영향력 확대와 집단지도체제라는 국정운영시스템, 그리고 전임 지도부와의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의 강조로 볼 때 중국 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신지도부의 보수적 성향은 정치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 유지에 더해 중국의 대국적 면모를 강조하는 등의 정책

노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18대 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정치·경제·사회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핵심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시대에서 계승되는 부분과 시진핑 시대에 변화될 부분을 비교·도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18대 보고는 현재 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시행중인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는데, 이는 개혁개방이래 축적된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18대 보고의 국내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신지도부가 직면할 국내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더구나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회복을 위한 민주화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개혁이 요원한 현실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의 수확률마저 떨어진다면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V장에서는 중국의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당대회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외인식 및 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망했다. 18대 보고에서 중국은 향후 글로벌 강국화를 겨냥한 지역 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기존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표명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 강국화 실현과 자국의 이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과 함께 군사력의 간접적 사용을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VI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했다. 18대 결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정책기조는 유지·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중 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분야에 대한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거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잠재적 갈등요인을 사전 관리하며 사안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 18차 당대회, 신지도부, 대내외정책, 한·중 협력방안



I. 서론

2012년 11월 8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이하 18대)가 막을 열었다.¹ 1921년 경찰의 삼엄한 감시 속에 단지 12명의 대표들이 참여했던 초라한 창당대회에 비한다면, 2,000여 명이 넘는 전국대표들이 베이징 중심의 거대한 인민대회당에 모여 내외신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현재의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달라진 위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 당대회는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일 뿐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실질적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정사항이 최고 통치 역량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²

역사적으로 회고하면 당대회 때마다 주요 지도부 인선과 중국 현대사의 획을 긋는 정책들이 발표되곤 했다. 예를 들어 14대(1992)에서는 장쩌민(張澤民)이 당 총서기로 발탁되면서 혁명원로가 아닌 전문정치인 시대를 선언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이 제시되었다. 15대(1997)에는 기술관료들의 본격 등장과 함께 소위 중국 정치의 ‘테크노크라트’ 시대를 열었고,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당장(黨章) 삽입을 통해 개혁개방의 기치를 굳건히 하기도 했다. 16대(2002)에서는 후진타오 시대의 도래를 알렸고, 공산당이 신흥자본가 계층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쩌민의 3개 대표사상이 지도이념

1. 중국은 18차 당대회 대신 주로 18대(18大)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회의를 표현할 때는 계(屆)를 사용, 18계1중전회(18屆1中全會)라고 쓰며 한국에서는 18기 1중전회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아직 이 표현에 대해 국내에서 통일된 논의가 없는 관계로 이 보고서에서는 매차 당대회를 줄여서 ○대로 표기, 차(次) 수를 강조할 때는 기(期)를 혼용해 사용했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기수를 표현할 때 역시 ○기로 표기했다.

2.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당장(黨章)의 수정 혹은 삽입된 내용들은 다음 해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책화·법제화된다. 1차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에 개최되었으며 1922년 2차 당대회에서 당장이 만들어졌다. 1977년 11차 당대회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으로 채택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17대(2007)는 후진타오(胡錦濤)집권 2기로 권력 계승의 안정화와 제도화를 추구하고 집단지도체제를 공고화했으며, 급속한 성장의 역설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조화사회(和諧社會), 소강사회(小康社會) 개념 등이 강조되었다.

이번 18대 역시 시진핑(習近平)지도부의 등장이라는 인사 교체가 있었고, 새 국정철학과 이념, 대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중국의 G2 부상에 대한 현실감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시진핑의 중국이 향후 어떠한 방향과 노선을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등 중국 핵심 엘리트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안정적 권력승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조롭게 대내외에 시진핑 시대의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중국에 대한 국내외의 희망과 기대가 큰 것은 분명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우선,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은 선부론에 입각한 불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지역 간, 도농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민생관련 집단 대중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다음으로 부패의 만연이다. 특히, 18대 이전, 보시라이 스캔들이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설상가상으로 인기가 높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부정축재 사건에 휘말리면서 대중들의 중국 관료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공산당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이지만, 공산당이 중

국 사회 속에 구조화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 다원성이 증가하면서 대중들의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개혁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공산당 일당독재를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이 대중의 보편적 참여와 권리의 보장을 담보하는 정치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 넷째, 소수민족 문제 역시 주요한 해결과제이다. 18대를 전후로 중국 티베트 지역의 승려들이 독립과 종교 자유, 그리고 인권보호를 요구하며 분신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내재화된 민족 갈등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갈 수 있을지의 문제 역시 중국 국내정치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혼란에 직면해있다. 중국 대중들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이다. 물론, ‘중국 특색’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지만 시진핑의 중국에게는 보다 구체화된 통치이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8대 이전에 언론지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국 공산당 당장과 관련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누락 사건 역시 중국이 사상의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국내 상황만큼이나 대외상황 역시 복잡하다. 중국은 막대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파위를 획득했다. 중국 국력의 성장은 탈냉전 이후 굳건했던 미국 패권 질서에 파동을 일으켰고, ‘G2’,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차기 패권 도전국의 지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 및 주변국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중국이 곧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고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패권 장악을 급속도

로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위협론은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현실화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국방력 확대나 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 분쟁,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이 주변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 비호 행위 등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중국은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북한의 비행을 두둔하는 외교적 행보를 했고,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 북·중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더 중시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 및 주변국들의 경계와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2010년의 미·중 갈등과 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 갈등처럼 중국의 외교가 더 공세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갈등의 학습을 경험으로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국의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책임 있는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와 관련이 깊은 개별국가가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12년은 우리뿐 아니라 한반도 관련 주변 4강국의 지도부가 교체된 한 해였기 때문에 각 국들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전망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비전을 제시한 중국 공산당 18대에 대한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중국 신지도부 인선결과와 당대회 문건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예측할 것이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과연 중국이 시대에 맞는 인식을 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유효한지를 진단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대

외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의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한반도 차원까지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너무나 중요하다. 물론, 당대회에서는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방향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반도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외정책의 전반적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향후 한반도에 미칠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이 연구 작업의 주요한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취할 국내정치적 방법론에 따른 중국의 운명이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신지도부 인사 결과와 18차 당대회 업무보고(十八大工作報告, 이하 18대 보고)라는 문건을 활용, 중국 신지도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예측에 있어 검증가능하고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매 당대회 때 발표되는 업무보고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비전과 대내외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 분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³ 또한, 지난 당대회 문건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의 체계성과 종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신지도부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의 특징, 의미, 그리고 개인들의 성향 분석을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18대의 기초와 의미 분석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국정철학(혹은 지도이

3.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18대 보고전문은 인민일보에 게재되었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胡錦濤同志代表第十七屆中央委員會向大會作的報告摘登,” 『人民网－人民日報』, <<http://cpc.people.com.cn/18/n/2012/1109/c350821-19529916.html>>.

그 밖에 18대 당대회에 관한 일차적 자료는 다음의 중국 내 전문 사이트에 수록된 것들을 참고로 했다. <<http://news.sina.com.cn/z/zhonggongshibada>>; <<http://cpc.people.com.cn/18/>>; <<http://www.xinhuanet.com/18cpcnc/zb/20121108/tp.htm>> (검색일: 2012.12.1).

념)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Ⅲ장은 신지도부 인선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권력 승계의 특징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상했다. 제Ⅳ장은 당대회 보고에 제시된 정책들을 정치·경제·사회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핵심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시대에서 계승되는 부분과 시진핑 시대에 변화될 부분을 비교·도출해내는 작업을 했다. 제Ⅴ장은 중국의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지난 당대회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외 인식 및 기조의 변화를 파악하려 했고, 글로벌 차원,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망했다. 제Ⅵ장은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고민했다. 이번 당 대회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Ⅱ. 18차 당대회의 기조와 의미

1. 핵심기조에 대한 분석

“흔들림 없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고,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

18대 보고에서 후진타오 전 총서기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 기조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⁴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기치의 확정과 재천명이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공표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사회주의 모색의 여정을 시작한 이래 중국특색사회주의는 중국 정체(政體)의 명확한 규정이자 발전 방식과 방향의 기치로 제시되어왔다. 1979년 덩샤오핑에 의해 처음 언급된 ‘소강사회’는 이어 1987년 제시된 윈바오(溫飽)-소강(小康)-대동(大同)이라는 3단계 발전론(三步走)을 통해 중국의 현실에 근거한 발전 단계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소강사회는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며 민족 부흥을 향한 사회 발전 단계이다.⁵ 중국은 16대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

4.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2年 11月 8日.

5. 공자는 ‘소강’을 세습·사유제가 정착되고, 각자의 합당한 몫을 정하는 소의(小義)와 가족을 챙기는 소인(小仁)이 중시되는 사회로 정의했다. 반면, ‘대동’은 대인(大仁)과 대의(大義)의 원리에 따라 화목과 영구평화가 달성되고, 이기적 ‘사유(私有)’와 반대되는 ‘개인 소유’에 근거한 완전고용과 보편복지가 실현된 신분 차별 없는 무계급 사회를 말한다.

강사회를 ‘건설’하여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해야하는 18대에서 이에 대한 기초가 다시금 중요하게 제시된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핵심기조였던 이 두 기치가 이번 당대회에서 재강조된 것은 중국이 지향하는 발전의 방향이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현실적 달성을 견인해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의 심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중국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고, 문제해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지난 30여 년간 고속 질주를 해온 중국은 현재 성공의 이면에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성장과 물질적 경제개발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배제문제를 확대시켰고,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폭동수준으로 상정된 0.5을 넘어 0.61에 달하고 있다.⁶ 개혁개방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인식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성장 방식과 속도,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해 딜레마에 봉착해 있으며, 수출 의존적 산업구조와 양적 성장 방식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안팎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는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대중에게 노출되어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익분화로 인한 각종 권리 주장 운동과 소수민족의 독립

6. 가장 최근 추정치는 중국 시난 재경대에서 2012년 12월 9일 발표한 2010년 중국 가계의 지니계수 0.61이다. 원문은 “中國家庭收入不平等報告,” 西南財經大學 中國家庭金融調查與研究中心을 참조.

요구도 여전히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과 과제도 만만치가 않다. 이후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성장 규모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자신의 핵심이익을 강경하게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이다. 그러나 이전과의 차이가 있다면 안정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전의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주변에 대한 ‘방치와 회피를 통한 안정’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강화된 힘과 위상을 활용해 주변환경을 자신에 맞게 조정하며 외부로부터의 장애와 도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대해 중국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갈등의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며,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제 또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의 성장은 예전처럼 빛의 뒤에 숨어 혼자 도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강한 발언권과 실력 행사를 통해 비로소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발전의 단계와 목표들을 달성해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한 자기식의 통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를 과도하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발전의 전제가 되며 중국은 이를 정책과 태도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 중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다시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강조는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당 통치력의 약화에 맞서 경제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중

국특색사회주의가 중국이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방향임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서구모델 유입과 간섭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또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인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이후의 중국 경제발전 모델과 방식의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도이념과 목표에 대한 분석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으로 ‘중화민족주의’와 ‘과학적 발전관’이 제시되었다.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환은 중국 인민들의 사상적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이념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공산당 지배 정당성의 경제 업적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 커져갔다. 현 시점에서 경제 업적에 의존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 업적은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필요조건일 뿐 더 이상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민을 통합시키고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부재는 공산당 통치와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인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필요는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 공산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 폐기했던 민족주의를 다시 꺼내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자긍심을 일깨움으로써 개혁개방의 지속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 했다.⁷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동원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면서도 그 포괄 범위를 계급에서 민족으로 확대하고, 현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더욱 견고한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 공산당은 자신의 위상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설정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 냈다.⁸ 18대 보고에서도 '중화민족의 발전'이 서두부터 크게 강조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적 특색'이자 그에 기반 한 '중국의 자궁'으로 연결되어 모든 정책을 실제 작동시키는 기저에 존재한다.⁹ 인민일보 사설은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고, 중화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이번 18대의 진중한 선포였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 특히, '중화민족의 부흥과 발전'은 18대 직후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전국대표대회 제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통해 당 총서기로 확정된 시진핑의 취임연설에서도 다시 강조 되었다.¹¹ 시진핑은 연설의 서두에서부터 '위대한 중화민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앞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해 중화민족 부흥에 분투하고 노력하자고 독려했는데 이는 18대 보고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¹² 물론,

7.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자산계급 및 모든 착취계급의 사상이 민족관계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공산당은 민족주의 폐약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창했다.

8.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서울: 나남, 2009), p. 46.

9.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부흥' 강조는 취임 직후 바로 가시화되었다. 신임 지도부 7인의 첫 행사로 11월 29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국가박물관을 방문하여 고난의 근대사와 극복을 다룬 '부흥의 길' 전시를 감상했다.

10. 『人民日報』, 2012年 11月 24日.

11. 시진핑 취임연설 내용은 習近平, “習近平十八屆一中全會講話,” 2012年 11月 15日 참조.

12. 18대 보고와 시진핑 주석 첫 연설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중국 공산당체제의 연속성

중화민족의 강조를 중국 공산당이 대중용으로 자주 사용해온 일개 정치적 수사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민주·자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중화민족 부흥과 발전방향’의 두드러진 강조는 중화민족주의가 그릇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¹³ 국내적으로는 민족단결을 강조하면서 소수자들(예를 들면, 소수민족, 사회빈곤층)의 자유·인권·권리를 애써 무시할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민족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G2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자국이익 위주의 대외관계를 추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적 발전관이 이번 18대를 통해 당의 지도이념(行動指南)으로 확정되었다.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특색사회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전면적인 발전, 조화를 중심에 두는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모토로 한다. 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의 균등한 발전, 그리고 환경과 자원 등과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발전을 통해 조화사회를 실현하려는 후진타오 지도부의 세계관이자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통하여 개혁개방기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안정속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려고 했다.

과학적 발전관이 17대에서 이미 당장에 삽입되었음에도 이번 18대에서 지도이념으로 다시 확정된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18대 보고 작성에 이미 시진핑 및 신임 지도부의 국정철학과 비전들에 관한 합의가 녹아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기현,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와 신지도부의 등장: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I 12-40, 2012.11.20).

1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p. 484.

전(前)지도자의 이념을 당장과 헌법에 삽입하여 기존의 이론과 정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도이념의 근간을 만들어왔다. 즉, 1982년 마오쩌둥(毛澤東)사상이 헌법에 삽입되었으며, 덩샤오핑 이론이 1997년 당장에, 그리고 1998년 헌법에 추가되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사상은 2003년 당장에, 2004년 헌법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2007년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에 삽입되어 새로운 지도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듯 지도자 정치이념의 당장 삽입여부는 해당 정치이념에 대한 역사적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차기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도이념 채택을 통해 과학적 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3개 대표사상과 함께 같은 대열에 서게 되었다.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이념 확정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생산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후진타오는 집권 1기 말부터 장쩌민 시대까지의 ‘성장일변도 경제발전 모델’이 양산해내는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분배와 균형을 강조하는 조화사회론과 과학적 발전관을 세우고 이를 당장에 삽입하여 중국 발전방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아직은 성장이 중요하며 분배를 고려할 시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장쩌민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분배를 강조하는 조화사회론의 당장 삽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과학적 발전관도 절충적 입장을 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 집권 2기인 17대에서야 비로소 당장에 삽입될 수 있었다. 18대에서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 이념 확정은 향후 중국 발전모델에서 분배와 균형이 보다 강조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 건설’이 단독으로 하나의 장을 구성하며 제시되고 당장에도 삽입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8대 보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견지와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로 개혁개방 견지, 생태문명 건설, 민생중심 발전,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이 제시되었다. 첫째, ‘개혁개방 견지’가 중국의 발전과 부강을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목표로 재확인 되었다. 이는 시장화와 개혁개방의 속도와 관련된 논쟁들과 보시라이의 ‘충칭(重慶)모델’ 등의 예에서 나타났던 좌파적 움직임들을 명확히 차단하고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¹⁵

둘째,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 성장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기존의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자원절약형, 즉 자연에 우호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고비용이 요구되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경제의 질적 전환을 하겠다는 이러한 선언은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적 내용이었으나 중국의 상황이 환경문제를 논할 단계에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선두에 제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의 시급성과 중국의 의식적 변화 및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¹⁶ 한편으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한 걸음 현실에서 구체화 되었다고도 평가 할 수 있겠다.

셋째, 민생중심 발전에 대한 강조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성장의 역설로 발생한 문제들로 사회적 불만과 동요가 매우 심각하다.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전면적 동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15. 충칭모델은 태자당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의 진입이 거의 확실시되던 보시라이가 중국 서부의 충칭(重慶)에서 실행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정부와 국영기업이 시장에 개입해 서민들의 주거 및 복지 향상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다. 충칭모델은 ‘홍색가요 부르기’와 ‘범죄 척결’ 운동(唱紅打黑) 등 마오시대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개혁개방의 부작용에 피로를 느끼는 중국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16. 來洁, “肩負起建設美麗中國”的歷史使命,” <<http://theory.people.com.cn/n/2012/1202/c40531-19762901.html>> (검색일: 2012.12.5).

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당 지도부가 성장률의 조정과 발전방식의 전환 및 구체적 민생안정 정책을 증시한 것이다. 18대 보고에 전반적으로 민생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이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기초적 목표설정으로 대변되고 있다. 민생에 대한 강조는 시진핑 취임연설에서도 다시 언급되었는데 시진핑은 더 좋은 교육, 안정적 직장, 만족스러운 소득, 믿을만한 사회보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 쾌적한 주거조건, 아름다운 주변 환경 등을 거론하면서 “인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일과 생활이 좋아지길 희망한다”면서 시진핑의 중국이 차후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부패척결이다. 올 초에 발생한 보시라이 사건과 이후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중국 고위 지도부의 부패 문제는 인민들의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부패척결은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 및 통치능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산당이 신뢰를 회복하고 통치 능력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이 당 부패를 엄단하고 민생 개선과 복리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위기 의식의 반영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당장의 수정 내용으로 삽입되었다. 이번 당장 수정안의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① 과학적 발전관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사상과 함께 당의 행동지침(行動指南)으로 확정되었다.
- ②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체계화되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이론체

¹⁷ 당장 전문은 런민왕 18대 특집 사이트 <<http://cpc.people.com.cn/n/2012/1119/c64387-19616005.html>> 참조.

제, 기본제도'가 당헌에 추가되었다.

- ③ 생태문명 건설이 당헌에 추가되어 5위1체(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건설)을 구성하였다.
- ④ 부패 척결 부분에서 당 지도기관과 당원 지도간부 뿐 아니라 “특별히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부패척결은 시진핑의 취임연설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 중에서 특별히 부패문제를 꼽으면서 “당원 간부들의 부패와 관료주의, 형식주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당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향후 반부패를 위한 보다 강화된 조치와 이에 따른 성과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18대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들은 기존의 당대회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는 권력교체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당 대 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정치체제적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한편으로는 빠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안정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 성향의 영향도 크다. 특히,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과거 지도부의 정책 계승을 가시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는 전통적 구조는 집권 1기의 지도부로 하여금 전 지도부와 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강한 동기로 작용한다. 실제로 향후 5년 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당대회 보고는 신임 총서기가 아닌 전 총서기에 의해 제시되었다.

18대에서 중국 지도부가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의 견지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주요 기조로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며,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 큰 기조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이번 당대회의 핵심 기조와 설정된 목표들은 이후 중국의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중국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고 중대한 전환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기존의 노선 고수를 통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현 GDP의 2배 성장, 민생안정과 내수시장 확대, 그리고 고위 지도부까지 아우르는 부패척결 등 현실 돌파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이에 대한 각론적인 접근과 분석은 이 보고서의 제IV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Ⅲ. 중국 공산당 신지도부의 특징과 의미

18대 직후인 2012년 11월 15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1중전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비롯한 중앙 정치국 위원 및 아래와 같은 주요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1. 신지도부 구성 내용¹⁸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 수가 16기, 17기의 9명에서 7인으로 축소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 총서기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強) 2인이 유임되고,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류원산(劉云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5인이 새로 선출되었다. 17기의 후진타오, 우방귀(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허궈창(賀國強), 저우용캉(周永康) 등 7인은 모두 연령 관계(68세 이상)로 퇴직했다. 이로써 시진핑을 좌장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향후 중국의 10년을 책임지게 되었다. 향후 19대 시기에는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과 리커창 2인 만이 다시 유임되고 나머지 5인은 연령관계로 모두 퇴직하여 대규모의 지도부 교체가 예견된다. 후진타오가 덩샤오핑에 의해 선임되어 1992년 14대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고, 시진핑 또한 17대 때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던 선례에 근거하면 19대 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차기 총서기 후보군이 선임될 것이 예상된다.

18. 18기 중앙정치국위원의 명단과 약력 및 구성은 중국 런민망 18대 특집 사이트 참조. <<http://cpc.people.com.cn/18/n/2012/1115/c350826-19590370.html>>; <<http://news.sina.com.cn/c/2012-11-15/121225587425.shtml>>; <<http://cpc.people.com.cn/GB/64162/351757/index.html>>. 16, 17기 중앙정치국 위원 관련 내용은 이하의 사이트 참조.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index.html>>;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index.html>>.

이번 9인에서 7인으로서의 상무위원 인원수 축소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상무위원 인원수는 후진타오를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쩌민에 의해 16대 때 9인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9인이라는 인원수가 전원참석과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무위원회 의사결정구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17대 때부터 후진타오에 의해 인원 축소가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인으로 구성된 18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향후 집단지도체제에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이름	생년	출생지	출신학교	전직	예 상 직 ¹⁹	계 파
시진핑 (習近平)	1953	산시성 푸핑	칭화대 화학·법학박사	부주석	국가 주석	태자당
리커창 (李克強)	1955	안후이성 딩위안	베이징대 법학·경제학박사	부총리	총리	공청단
장더장 (張德江)	1946	랴오닝성 타이안	김일성종합대 경제학	충칭시 서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장	상하이방
위정성 (俞正聲)	1945	저장성 샤오닝	하얼빈군사 공정학원	상하이시 서기	전국정치협상회 의 주석	태자당
류윈산 (劉雲山)	1947	산시성 신저우	공산당 중앙당교	당중앙 선전부장	국가 부주석	공청단· 상하이방
왕치산 (王岐山)	1948	산시성 천전	시베이대 역사학	부총리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태자당
장가오리 (張高麗)	1946	푸젠성 진장	샤먼대 경제학	텐진시 서기	상무부총리	상하이방

19. 현재로서는 2명만 확정적이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자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았고,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선출되었다. 나머지 5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가주석, 총리, 전국인대, 정협 등의 국가 직책은 형식상으로는 2013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대에서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하 정치국원)은 상무위원 7인을 포함, 류연동(劉延東), 왕양(汪洋), 리위안차오(李源潮) 등 3인이 유임되었고, 마카이(馬凱), 왕후닝(王滬寧), 류치바오(劉奇葆), 쉬치량(許其亮), 쑨춘란(孫春蘭), 쑨정차이(孫政才), 리젠궈(李建國), 장춘시엔(張春賢), 판창룽(范長龍), 멩젠주(孟建柱), 자오러지(趙樂際), 후춘화(胡春華), 리잔수(栗戰書) 귀진룽(郭金龍), 한정(韓正) 등 15인이 새로 선임되었다. 향후 19대에서는 1950년 이후 출생자 12인이 유임되고 6인이 퇴임한다. 유임되는 15인 중 5인이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게 된다.

● 표 III-2 18기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7인 제외)

이름	생년	출생지	출신학교	전직	예상직위
귀진룽 (郭金龍)	1947	장쑤	난징대 물리학	베이징시 당서기	베이징시 당서기
한정 (韓正)	1954	저장	화동사범대학 국제관계, 경제학석사	상하이시 시장	상하이시 당서기
쑨춘란 (孫春蘭)	1950	허베이	중앙당교 석사	푸젠성 당서기	톈진시 당서기
쑨정차이 (孫政才)	1963	산둥	중앙농업대학, 농학박사	지린성 당서기	충칭시 당서기
후춘화 (胡春華)	1963	후베이	베이징대학 중문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광둥성 당서기
마카이 (馬凱)	1946	상하이	인민대 정치경제, 경제학석사	국무원 비서장	재정 금융담당 부총리
리젠궈 (李建國)	1946	산둥	산둥대학 중문	전국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정협 제1 부주석
류치바오 (劉奇葆)	1953	안후이	지린대학 정치학, 경제학석사	쓰촨성 당서기	공산당 선전부장
류연동 (劉延東)	1945	장쑤	지린대학 정치학, 법학박사	공산당 통전부장	국무원 부총리

이름	생년	출생지	출신학교	전직	예상직위
왕양 (汪洋)	1955	안후이	중앙당교, 공학석사	광둥성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멍젠주 (孟建柱)	1947	장쑤	상하이 기계학원, 공학석사	국무원 공안부장	정법위원회 서기
리위안차오 (李源潮)	1950	장쑤	중앙당교, 법학 박사	조직부장/서기 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판창룡 (范長龍)	1947	랴오닝	중앙당교	지난군구 사령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 (許其亮)	1950	산둥	공군제5항공학원	인민해방군 공군사령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오러지 (趙樂際)	1957	산시	중앙당교 석사	산시성 당서기	신장자치구 당서기
장춘시엔 (張春賢)	1953	허난	하얼빈 공업대학, 관리학석사	신장자치구 당서기	공산당 조직부장
왕후닝 (王滬寧)	1955	산둥	푸단대학 국제정치, 법학석사, 교수	공산당 정책연구실 주임	외교담당부총리
리진수 (栗戰書)	1950	허베이	허베이사범대학	중앙판공청 부주임	중앙판공청 주임

정치국원의 개인적 이력과 특성은 향후 공통된 이력과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지도자 집단이나 파벌의 출현,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권력투쟁의 구조와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중요하게 분석되어 왔다. 18기의 신임 정치국원 25인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별, 성별 특징을 보면 전원이 한족이며, 대다수가 남성이다. 여성위원은 17기의 류옌동이 연임되고 쑨춘란이 새롭게 선임됨으로써 2인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소수이다. 17기 때에도 후이족(回族)인 후이량위를 제외하면 전원이 한족이었으며 류옌동 1인만이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 최고위층에서 소수민족과 여성이 접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하겠다. 이는 중국 최고위의 정책결정이 한족과 남성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세대가 젊어졌다. 18기 정치국원의 평균연령은 56.2세로 17기 평균연령인 61.8세보다 5.6세 낮아졌다. 정치국 상무위원만의 연령을 보면 약 63세로 16기, 17기 평균 연령인 62세보다 1세 높아졌다. 이는 왕양과 리위안차오 등의 젊은 5세대 개혁세력들이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신임 위원들이 60대 중반의 4.5세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8대의 인사교체를 4세대에서 5세대로의 교체로 규정했던 기존의 분석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평균 연령의 연소화와 개혁적 성향의 증대에 대한 기대가 꺾였으나 정치국 상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국원들의 평균연령이 54세로 젊은 5세대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개혁과 변화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대에 많은 수의 현 정치국원의 유임이 예상되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중앙의 정책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출생지역을 보면 발전지역인 동부 연안에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인이 북부지역 출신이었고, 중부도 2인(후춘화, 장춘시엔)으로 17기의 1인(허귀창)보다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남지역과 남부지역 출신자는 없었다.

넷째, 평균학력은 더 높아졌다. 17기와 마찬가지로 25인 전원이 대학 졸업자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법학박사), 리커창(경제학 박사) 외에 전원 학사 출신인 반면, 정치국원 내에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왕후닝, 장춘시엔, 자오러지, 한정, 쑨춘란, 류치바오, 쑨정차이, 리위안차오, 마카이, 명젠주, 류옌동 등 11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쑨정차이(농학법학박사), 리위안차오(법학박사), 류옌동(법학박사)은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17기 정치국원 중

4인의 박사학위, 5인의 석사학위 소지자와 비교할 때 18기 정치국원 중 5인이 박사학위, 8인이 석사학위 소지자로 평균 학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기술관료에서 인문사회를 전공한 일반관료로의 전환이 가시적이다. 전공을 보면 이공계 전공자가 줄어들고 인문사회 전공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위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인문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했다. 상무위원을 뺀 나머지 정치국원 18인 중 11인이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했다. 18기 중앙위원에서도 기술관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32.7%, 일반관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62.8%로 나타났다.

공산당 정치국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서기처의 경우, 류윈산이 서기처의 총 관장을 맡게 되었고, 류치바오(劉奇葆), 자오러지(趙樂際), 리찬수(栗戰書), 두칭린(杜靑林), 자오홍주(趙洪祝), 양징(楊晶)이 선임되었다.

표 III-3 서기처 인사 내용

이름	연령	전직	예상	비고
류윈산(劉云山)	65	공산당 선전부장	중앙서기처 제1서기	유임
자오러지(趙樂際)	55	산시성 당서기	중앙조직부장	신임
류치바오(劉奇葆)	59	쓰촨성 당서기	공산당 선전부장	신임
리찬수(栗戰書)	62	공산당 판공청 부주임	공산당 판공청 주임	신임
자오홍주(趙洪祝)	65	저장성 당서기	기울검사위 부서기	신임
두칭린(杜靑林)	66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신임
양징(楊晶)	49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주석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신임

2. 신지도부 인선과정과 구성의 특징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은 국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도부 교체에 있어 제도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18대에서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정권교체가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정권교체에 이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16대 이후 지도부의 교체를 이루어내는 68세 기준 연령규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된 듯하다. 연령규정은 법령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관행으로 작동하여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이루어내고 있다. 2006년 반포된 <당정 영도간부 임기 잠정 규정>에는 당정영도간부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동일 직무를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68세 연령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10년 임기의 지도부 교체를 제도화하고 있다. 16대 때는 장쩌민이 예외 사항으로 연령을 넘겼음에도 유임되었고, 17대 때에 자칭린(賈慶林)이 67세 나이로 퇴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쩌민의 지원으로 지도부에 재선되었지만, 18대에서는 예외없이 연령규제에 의해 지도부가 교체되었다. 이것은 연령규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도부 인선이 보다 제도화되고 확대된 협의 구조하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 17대 때 처음 시행되었던 ‘민주추천회의’가 18대 인선에서도 활용되었다. 민주추천회의는 2007년 17대를 준비하면서 쩡칭훙 부주석의 제안으로 실행된 것으로 2007년 6월 25일 베이징 중앙당 교에서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후보포함)과 일부 고위직 간부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당원지도간부회의’를 개최(현직 최고지도자 뿐만 아니라 장쩌민, 리펑, 주룽지 등 전직 최고 지도자가 인선 및 당헌 수정 등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결정 방식)하고, 회의에서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200명의 정치국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추천

투표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민주추천회의는 당시 시진핑 부주석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5월 중순에도 중앙위원 등 370여 명의 고위 당정간부(성장 및 부장급, 대규모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가 참여하는 ‘민주추천회의’가 개최되었고, 7월에 400여 명의 공산당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여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을 선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선구조의 확대는 당 원로 지도부의 개입과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인선과정에서 당 원로 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대회 주석단²⁰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주석단은 시진핑이 대회 비서장을 맡고 있으며 류윈산, 리위안차오, 리잔수가 부비서장, 후진타오 등 41명이 주석단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주석단 명단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원로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13대부터 17대에 이르기까지 전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등장했다. 13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리핑, 차오스, 장쩌민, 쑹핑, 리루이환 등이 있고, 14기에 주룽지, 15기와 16기의 웨이젠싱과 리란칭이 있다. 16기에 처음으로 상무위원이 된 쟡칭홍, 우관정(吳官正), 뤼간(羅干)도 주석단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인선과정에 있어 협의구조와 원로의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당대회에서의 인선은 대회주석단이 중앙위원과 중앙기율위 명단을 제출하고, 대표단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대표들이 후보자 명단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석단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대회주석단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회 주석단 주요 명단〉²¹

후진타오(胡錦濤), 리커창(李克強), 허궈창(賀國強), 저우융강(周永康), 왕강(王剛), 왕러취안(王樂泉), 왕자오궈(王兆國), 왕치산(王岐山), 후이량위(回良玉 위구르족), 류치(劉淇), 류윈산(劉云山), 류옌둥(劉延東, 리위안차오(李源潮), 왕양(汪洋),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쉬차이허우(徐才厚), 귀보슝(郭伯雄), 리펑(李鵬), 완리(萬里), 차오스(喬石),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李瑞環), 송핑(宋平), 웨이젠싱(尉健行), 리란칭(李嵐清), 쩡칭홍(曾慶紅), 우관정(吳官正), 뤼간(羅幹), 판창룽(范長龍), 쉬치량(許其亮), 허용(何勇), 링지화(令計劃), 왕후닝(王滬寧)

셋째, 후진타오가 정권 출범 시기에 장쩌민의 중앙 군사위직 승계 유보로 인해 ‘미완의 권력 승계’ 상태였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은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이양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집권기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1982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93조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덩샤오핑도 중앙군사위 주석 직만은 유지했으며, 장쩌민도 국가주석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중앙군사위 주석 직을 놓지 않았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후진타오도 시진핑에게 향후 1, 2년간은 군사위 주석 직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로 당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 후 주석은 총서기직과 군사위 주석직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에게 위임함으로써 보시라이 사건과 각종 민생문제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넷째, 권력 균형적 측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면적 불균형과 내부적

²¹ 대회 주석단 주요 명단 및 247명의 전체 명단은 <<http://cpc.people.com.cn/18/n/2012/1107/c350823-19522459.html>>을 참조.

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 최고위 지도층의 권력투쟁은 중국정치가 안고 있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문제이다. 어느 정치 계파가 정권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정치적·정책적으로 변화가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중국 정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16대에서 후진타오가 등극한 이후 중국 지도부는 상하이방, 태자당, 그리고 공청단으로 계파가 분류되어 각 계파의 경력, 정치적 정향과 세력 정도를 근거로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18대 또한 태자당,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단으로 계파를 분류하던 기존의 방식에 근거하여 장쩌민(상하이방)의 완승과 후진타오(공청단)의 완패로 결론짓는 분석이 존재한다. 사실,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선에 대한 계파 분석을 보면 이는 매우 타당성 있는 분석이다. 왕양과 리위안차오 등 강한 개혁성향의 공청단 출신이 약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커창 1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계파는 태자당과 상하이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대와 17대 이어 상하이방은 이번 18대에서도 크게 약진했다. 시진핑과 위정성 2인은 상하이 시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장더장, 류원산, 장가오리도 장쩌민 계파로 분류된다. 정치국에서도 상하이방의 약진은 두드러지는데, 상하이 시 부서기 출신 명젠주, 상하이 시장 한정, 상하이 푸단대 법학원장 왕후닝이 정치국원으로 새로이 진입했다. 이로써 정치국에서 상하이시 출신은 5인이다. 특히, 상하이시 부서기 출신의 전 공안부장 명젠주가 11월 19일 중앙정법위원회 서기²²에 임명됨으로써 상하이 출신이 사법권까지 장악한 것에 대해 ‘특정 지역의 독주’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2. 정법위 서기는 법원, 검찰, 공안, 국안(국가 안전부), 무장경찰 등 사법부와 경찰 병력을 총지휘하는 치안총책이다.

그러나 상하이방의 약진을 후진타오의 완패로 볼 수만은 없다. 정치국 상무위원에 후진타오 계파의 진입이 실패했지만, 다수가 정치국원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리틀 후’로 불리는 6세대 지도자 후춘화의 정치국 입성은 후진타오 계파가 다시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한 왕양과 리위안차오는 19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후 주석의 그림자’로 불리는 링지화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 주임이 통전부장과 주석단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따라서 이번 인선을 후진타오의 완패로 평가할 수는 없다. 후진타오 계파 역시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19대에 새로운 약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존연구가 보여준 계파 분석은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계파는 주로 고향이나 학교, 직장, 출신성분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크게 상하이방, 공청단(툰파이), 태자당으로 분류하였다. 장쩌민 주석을 좌장으로 하는 상하이방은 상하이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진 파벌이며, 공청단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계파이다. 태자당은 중국의 고관 자제들을 지칭하는 말로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연계성이 강하므로 크게는 태자당·상하이방과 공청단으로 분류한다. 이 두 계파는 기존에는 일정한 정책 성향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엘리트 그룹으로도 명명되는 태자당·상하이방은 경제효율, 연안지역 발전, 성장우선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대중그룹이라고도 하는 공청단은 사회통합, 균형성장과 조화사회 강조, 환경 중시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공산당 내의 파벌 간 대립은 이념과 노선 혹은 정책적 성향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권력 장악과 이해관계에 기

반하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계파는 편의상 나누어지는 것인데다 핵심 인물들의 필요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계파성을 고정적이고 항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권력구조를 너무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현재 18기 지도부는 여러 계파에 중첩적으로 연을 맺어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장더장은 상하이방과 태자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로, 광둥성(廣東省) 당서기 재직시절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순(習仲勛) 전 부총리를 모신 인연이 있다. 위정성은 태자당이자 상하이방이지만 2007년 상하이 당서기 선임 이후 시진핑을 지지하고 있다. 류원산은 공청단 출신이지만 장쩌민 계파로 분류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이번 인선에 6세대 지도자가 등장했다. 정치국원에 공청단 출신의 선두주자인 후춘화 현 내몽골 서기와 농업전문가 출신의 쑨정차이 현 길림성 서기가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49세의 젊은 지도자로서 각각 광둥성과 충칭시 서기를 맡으면서 향후 6세대 지도부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 번째 이번 인선의 특징은 사회 분위기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당 지도부의 부패 문제와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인사가 눈에 띈다. 우선 중앙기율검사위에 왕치산이 선임되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당원 감찰과 반(反)부패 담당하는 곳이며 보시라이를 조사한 곳도 바로 이 기관이다. ‘해결사’로 통하는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은 것은 향후 중국 정부의 반부패 운동의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부패 문제 척결에 대한 당의 의지가 잘 드러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수민족 분쟁의 안정을 위한 인사도 눈에 띄는데, 두칭린(杜靑林)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과 몽골족인 양징(楊晶)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 중앙서기처 서기에 임명되었다. 두칭린은 최근까지 중

국내 소수민족과 홍콩 마카오 문제를 관장하는 통일전선 공작부장을 지냈다. 몽골족인 양징이 주임을 맡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 내에서 소수민족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두칭린과 양징의 중앙서기처 서기 임명은 최근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 소요 사태가 빈번한 와중에 중앙위원회의 소수민족 정책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기처의 인선을 통해 향후 당의 선전 기능이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가 부주석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기처 제1서기 류윈산이 중앙선전부장 출신이며, 류치바오 쓰촨성 서기가 중앙선전부장과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지도부가 특히 선전 분야에 힘을 쏟아 집권 초기 보시라이 사건 여파로 어수선해진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3. 신지도부 구성이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는 함의

신지도부 구성의 특징을 통해 중국 정책변화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신임지도부의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정치개혁보다는 안정추구가 예상된다.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계파 간 합의가 지도부 선발의 기준이 되면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수호하면서도 여러 계파가 용인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18기 지도부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대다수다. 이는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도 신중하고 안정 지향적이며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 정치개혁이나 민주화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현재의 안정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모색될 것이다. 18기에서 경제분야는 리커창 총리, 장더장, 장가오리, 왕치산 등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경제 체질개선과 분배를 강조하는 리커창이 경제 영역의 수장을 맡음으로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인사에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 출신들이 약진한 특징이 있다. 이는 중앙의 지방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신지도부에 서부지역 경험자의 약진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자오러지 산시성(山西省)서기가 중앙조직부장으로 승진했으며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도 구이저우성(貴州省)서기를 지냈다. 귀진롱 베이징 서기 또한 현직 서부지역 지도자들과 티베트(西藏)에서 11년간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외 후춘화 네이멍구 서기, 류바오치 쓰촨성(四川省)서기, 장춘센 신장자치구(新疆)서기 등 6인이 정치국원에 입성했다. 이는 과거 개혁개방지역인 연안지역 경험자들이 우대받던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은 2011년에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기초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신임 인사구성으로 인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의 구체적 입안은 2016년 18기 5중전회에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지난 30여 년의 개혁개방 노선의 지속과 더불어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국가

목표를 재확인했고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제발전 방식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수 진작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강조했다.

셋째, 대외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면서 중국의 대국적 면모가 강조될 것이다. 외교 분야 인사를 예상해 보면, 리위안차오 당 중앙조직부장과 왕후닝 전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정책연구실 주임이 후임 외교 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외교는 국가주석이 직접 주관하며 공식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중앙외사영도소조를 통해 당의 외교방침을 국무원이나 공산당 대외연락부 등 외교관련 부문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외교정책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평화발전 추구의 기존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협력적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신장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적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이나 영토문제 같은 소위 핵심이익 부분에서는 점증하는 국내 민족주의적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보면 18기 지도부는 순조로운 권력이양,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의 동시 이양, 그리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4.5세대로 최고 의결집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리더십 전환기의 리스크가 경감되었고,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원로의 영향력 확대와 집단지도체제라는 국정 운영 시스템, 전임 지도부와의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의 강조는 신지도부로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다른 민주정치 시스템 하에서의 지도부 교체와는 달리 정책적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의 개혁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18차 당대회의 정치·경제·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18대 대내정책의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18대 보고는 현재 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실시 중인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등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86번이나 사용하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8대 보고는 기존 17대까지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4위1체의 핵심 정책 사항에 생태건설을 새로 추가하여 5위1체로 확대·개편하면서 동시에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개혁의 구체안은 늦어도 2013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²³

18대의 개혁 위주의 정책기조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도입 이후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결합으로 막대한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33년간 축적된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각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이며 현상유지로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고통스러운 개혁에 대부분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가 참여할 것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공산당은 정치개혁과 발전보다는 경제개혁과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발전도 정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당대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

23.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집단지도체제의 구체적인 대내정책 관련 평가가 이른 감이 있지만 18대 보고의 대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시진핑과 리커창을 필두로 하는 차기 지도부의 향후 10년간의 대내정책을 가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책들을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누어 중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분석하며 17대로부터 지속되는 부분과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18대 보고에서 제시된 정치와 정치개혁 부문의 정책에서는 ‘변화’보다는 ‘지속’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18대 보고가 17대 보고와 큰 차이가 없이 기존의 내용들을 재확인 및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서 작성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민민주, 사회주의민주협상, 기층민주제도, 의법치국, 기층당조직 건설, 당내민주, 반부패 등의 핵심 정책들은 기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사상 등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언급이 17대 보고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²⁴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변모한 중국공산당에게 위의 사회주의 이념들의 중요성은 갈수록 상징적인 의미로 그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4세대 최고지도자 후진타오와 5세대 최고지도자 시진핑이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물론, 이것은 국가체제 차원의 정치개혁이라기보다는 공산당 내부 차원의 정치개혁이라는 것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통치와 같은 옛 길(老路)

²⁴ 17대와 18대 보고에서 사용된 각 단어의 횟수는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주의: 25회/8회, 마오쩌둥사상: 5회/4회, 덩샤오핑이론: 9회/4회, 3개대표사상: 9회/4회, 과학적발전관: 21회/16회.

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서구형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그릇된 길(邪路)로 전진하지도 않을 것임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분야는 지난 10년간 4세대 지도부의 개혁세력, 특히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가 강조해 온 공산당으로의 지나친 권력집중, 보시라이 사건과 원자바오 일가의 축재 폭로로 더욱 부각된 공산당의 부패,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보고에서 후진타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노선과 정치체제 개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드시 당이 이끌고 인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의거한 통치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근본으로 삼고, ‘당과 국가의 활력증대, 인민들의 적극성 동원’을 목표로 삼아 민주사회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의 주요 부문은 크게 국가 부문 정치개혁(要堅持走中國特色社會主義政治發展道路和推進政治體制改革)과 당 부문 정치개혁(全面提高黨的建設科學化水平)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특색의 정치는 중국 공산당정권이 당-국가체제(party-state)를 핵심 정치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들과는 다르게 당의 생존에 국가의 발전과 운영이 종속되고 당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의 초점이 전체적인 중국의 국가체제보다는 공산당 내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5.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관해서는 진성홍 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참조.

가. 국가 부문 정치개혁의 주요 사항들

18대 보고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근본임을 의미하는 ‘인민민주’가 중국특색 사회주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국가 부문의 정치개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체제 개혁이 중국의 전면적 개혁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핵심개념을 나열했다. 물론, 이러한 ‘좋은’ 개념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고, 중국 국내외를 불문하고 학계와 정책분야 모두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들은 크게 7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서 제시되었으며 인민대표대회 개혁, 사회주의협상민주제도 개혁, 기층민주제도 개혁, 의법치국의 전면적 진행, 행정제도 개혁, 권력 운영감독제도 개혁, 통일전선의 강화가 그 내용이다. 이는 지속의 맥락 아래서 17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① 인민대표대회 개혁: 인민들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 감독, 결정, 임명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공작조직의 협조를 강화한다. 또한, 기층인민대표 중에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들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당정 간부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대중의 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더하여 기층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법에 의거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② 사회주의 협상민주제도 개혁: 중국 인민민주의 한 축인 사회주의 민주협상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여덟 개의 우당들과의 협력과 광범위한 정치협상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주당과의 정치협상, 기층 민주협상을 적극 전개한다.

- ③ 기층민주제도 개혁: 농촌과 도시의 기층민주제도를 보완하여 인민들의 법에 의거한 직접적인 민주권리행사를 돕는다. 기층 당조직의 영도 하에 활발한 기층 대중 자치 메커니즘을 정립하며 질서 있는 정치와 행정 참여 확대, 기층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 기층 당조직과 대중의 논의협상 강화 등을 통하여 기층민주제도를 공고히 한다. 또한, 기층행정단위와 더불어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관리제도를 보장한다.
- ④ 의법치국의 전면적 진행: 기존에 추진해 왔던 법에 의한 국가 통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법의 철저한 준수, 법의 엄중 집행,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장하며 법에 의거한 행정을 추진하여 공정한 법 집행 구현한다. 사법 체제 개혁을 강화하여 재판·검찰기관이 법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결·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산당은 인민들을 이끌고 헌법, 법률을 제정하지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간부 개인의 생각으로 법을 대신하거나 권력으로 법을 뛰어넘거나 사사로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⑤ 행정제도 개혁: 행정체제 개혁 심화의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의 분리 등과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무 관리기능과 국유자산 출자자 직책 분리, 행정기관과 사업기관 분리 등을 통해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고자 한다. 기관 정원 통제와 간부 직급 간소화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행정인허가제도의 개혁과 사업단위의 개혁 또한 추진한다.

- ⑥ 권력운영감독제도 개혁: 대중이익과 직결되는 결정은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중이익을 해치는 조치는 방지하며 권력 운영을 공개하는 동시에 규범화의 추진을 통해 공산당사무, 정부 사무, 사법, 각 분야 사무 등의 대중 공개 제도를 완비한다. 당내 감독, 민주감독, 법률감독, 여론감독의 강화를 통해 정치권력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한다.
- ⑦ 통일전선의 강화: 애국통일전선의 전 방위적 강화를 통한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외동포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애국주의,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통일전선의 사상정치 기반을 공고화하고 당 외 대표 인사조직 구축을 강화하여 당 외 인사들을 각급 정부기관의 요직에 기용토록 노력한다. 당의 공정한 민족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 이행하고 소수민족 자치제도를 유지하며 민족단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사회계층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 기여토록 유도하며 해외교포와 귀국한 교포가족들을 포용하여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나. 당 부문 정치개혁의 주요 사항들

당 부문의 정치개혁은 전 인민을 위한 소강사회 건설, 사회주의현대화 추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당-국가 체제 하에서 공산당의 인적, 조직적, 사상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서 2011년 말까지 8,260만 명을 넘어선 당원들은 공산당의 핵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엄청난 수의 당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제도의 방만함, 그리고 통제에의 어려움은 당 부문 정치개혁을 한 번의

개혁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으로 만들고 있다.²⁶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혁명당으로서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집정당으로 재탄생한 당의 영도 능력과 집정 능력의 끊임없는 제고를 위한 7가지 부문, 즉 중국공산당의 이상과 정신의 추구, 인민을 근본으로 삼는 인민을 위한 정치 추구, 당내민주의 강화, 당간부인사제도개혁과 간부수준 제고, 당의 우수인재의 등용, 기층 당조직건설 강화, 그리고 반부패 활동 강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고질적 문제인 부패 문제가 17대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 ① 중국공산당의 이상과 정신의 추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혁명당에서 집정당으로 변모한 공산당의 사상적·이론적 기초에 대한 강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공산당 사상의 기초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장쩌민의 3개 대표사상의 융합인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당 간부의 사상교육은 당의 능력을 강화하는 기초이다.
- ② 인민을 근본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정치 추구: 인민을 위한 당의 복무는 인민을 근본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집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근본이 된다. 당과 인민군중은 혈육의 관계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인민이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의 목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민심을 끊임없이 수렴하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자연합 등의 인민 단체들과 충분히 연대하여 인

26. 中央組織部組織一局, “不斷增強黨員隊伍的生机活力—關於黨的十七大以來黨員隊伍建設情況的調研報告,” 『光明日報』, 2012年 10月 29日, <<http://theory.people.com.cn/n/2012/1029/c40531-19416706.html>> (검색일: 2012.12.12).

민군중의 뜻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③ 당내 민주주의 강화: 당내 민주성과 민주제도의 강화는 당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민주집중제 하에서 당내민주제도는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핵심이며 당원이 주체가 되어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당의 대표회의에 노동자, 농민 대표의 비례를 확대하고 당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며, 향진급 기층의 당대표대회의 연례화, 현시구급 당대표대회의 상설화를 확대한다. 특히, 당내 선거 제도 중 당선자보다 후보자를 많게 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차액선거의 확대를 추진한다. 기층의 당대표대회 강화를 위하여 여러 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
- ④ 당 간부 인사제도 개혁과 간부수준 제고: 공산당 집정의 핵심 대오인 당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을 우수간부 충원과 기존 간부 간의 건강한 경쟁 유도 등을 통하여 추진한다. 당 간부들의 감독을 강화하면서 공무원제도를 완성하고 당정 부문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의 인사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전반적인 당 간부의 질을 향상시킨다.
- ⑤ 당의 우수인재 등용: 지속적으로 우수한 당 간부의 충원을 위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당과 국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핵심인재들을 활용하고, 특히 해외인재를 적극적으로 충원한다. 이는 당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 ⑥ 기층 당 조직 건설 강화: 당의 집정 능력의 기초가 되는 기층 당 조직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촌과 도시의 기층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비공유제 경제 조직과 사회조직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한다. 기본적인 기층 당 조직 내의 당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청년노동자, 농민, 그리고 지식인 계층 내의 당원 수를 확대하며 기층에서의 당원 조직을 최적화한다.

- ⑦ 반부패 활동 강화: 반부패와 청렴한 정치건설은 당의 일관되고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며 인민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정치문제이다. 당정간부들의 부패는 당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당정간부의 반부패 정신교육 강화, 엄격한 반부패 감시활동과 법적 처벌의 적용,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반부패 법률과 검찰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반부패 활동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하여 부패 당정간부들의 해외 도피와 그에 따른 재산의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 ⑧ 당의 기율 강화와 당의 집중과 통일: 중앙부터 기층까지 당 전체의 집중력과 통일성은 국가의 장기적인 통치 능력의 근간이다. 이는 각급 당 조직과 당원들, 간부들, 특히 지도자급 간부들의 당장(党章) 수호 의지에 의존하며 중앙의 뜻과 권위가 지방의 최말단까지 전달되어 수행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아래에서는 대책이 있다”는 말로 상징되는 지방 정부와 간부들의 중앙 정부의 정책 왜곡과 무시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다. 정치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인민의 정치참여 확대, 법치의 강화, 행정서비스 강화, 당정 감독체계 강화를 핵심 개혁 정책 사안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것은 평가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4세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이 해결은 고사하고 더 악화시켜버린 당과 정부, 군대, 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만연한 부패문제의 척결과 확대

된 당중앙위원회 차액선거 실천 등의 ‘당내민주화’가 핵심 정치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17대에서 이미 제시된 것과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된 국가와 당의 정치개혁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주목할 것은 당 건설의 핵심 사업으로서의 반부패 강화이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로서의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몇 국가에서 벌어진 사회 혼란과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패이고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난 많은 사례에서 부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당과 국가를 망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²⁷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도 “중국 특색 반부패 청렴의 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감시체제 강화, 당정간부 청렴교육 강화, 당기율 적용의 강화, 반부패 관련 법안과 제도의 강화,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법집행 등의 여러 가지 기존 대책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변화는 반부패 활동의 국제공조 강화로서 2011년 6월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해외로 도피하며 약 8,000억 위안(약 144조 원)을 해외 반출한 16,000명~18,000명에 달하는 중국의 부패 관료들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통제해나갈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²⁸

27. 習近平, “習近平十八屆一中全會講話,” 2012년 11월 15일. 최근 중국의 부패 구조적 경향에 대해서는 Andrew Wedeman, *Double Paradox: Rapid Growth and Rising Corruption in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이러한 부패는 정치엘리트인 각급 정부와 당의 간부들과 새로운 신흥자본가들과의 후견인-수혜자 관계(Patron-Clientelism)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Bruce J. Dickson,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28. “11년간 무려 210조 원을 해외로 빼돌린 공직자들,” 『조선일보』, 2012년 11월 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1/2012110100183.html> (검색일: 2012.11.25).

국가와 당의 정치개혁 부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 즉, 당을 넘어서는 국가체제에 대한 -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바로미터로 취급되어 온 촌민위원회 선거 등 기층민주제도의 상급으로의 확대, 당정분리,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엘리트 정치구조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새로운 지도방침과 정책노선이 제시되어야 할 당대회에서 기존의 후진타오도 미래의 시진핑도 정치개혁을 강조했을 뿐 정책면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개별적인 “보완적” 정치개혁, 즉 차액선거 확대를 비롯한 당내 민주화, 당 기층 민주주의 확대, 법에 의한 통치의 확대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어려울 것이다.²⁹ 만약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체제의 구조적 문제인 부패 문제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의 한계라고 하겠다.³⁰

2.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18대 보고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부문(加快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和加快轉變經濟發展方式)에서는 17대에서 제시된 경제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큰 기초를 지속하면서 분배를 조금

²⁹ 조영남,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서울: 창비, 2012) 참조.

³⁰ Cheng Li, “The End of the CCP’s Resilient Authoritarianism? A Tripartite Assessment of Shifting Power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211 (September 2012), pp. 595~623.

더 강조하는 변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17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제12차 5개년 계획(12.5)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정책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강조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인민생활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성장 모델을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형으로 전환하는, 즉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발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육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여러 형태의 협력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끊임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차기 총리인 리커창은 향후 10년간 중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목표로 4대 신현대화, 즉 산업화, 정보기술응용, 도시화, 그리고 농업 현대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총 5개의 핵심 부문의 정책들, 즉 전면적인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혁신중심의 개발전략 구현,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도시농촌발전의 일체화, 그리고 개방형경제 수준의 제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①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 간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두 부문, 즉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조화를 통해서 추진된다. 특히, 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유제의 다양한 형식을 발전시키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하여 각종 국유재산들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국유경제는 인민경제와 국가안전의 핵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당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공유제 경제 조직들에게도 생산요소 확보와 시장경쟁에서 공평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 문제가 되어 왔던 국가와 집체의 공유공공자산 매각의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세금

- 정수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체계를 정비한다.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하여 민영금융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 ② 혁신중심의 개발전략 구현: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생산력 증대와 종합국력을 향상하는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초 원천 기술 개발을 시장과 산학협동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에의 활용에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도 포함된다.
- ③ 경제구조에 대한 전면적 전략 조정: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생겨난 여러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와 소비 잠재력의 급속한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의 맥락에서 제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산업 적용을 확대하며 대형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각각에 적합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는 또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잡힌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인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효율적 발전과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호구제도의 개혁과 도시유입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적극 추진한다.
- ④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추진: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잡힌 발전의 핵심은 농업, 농촌, 농민의 삼농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과 농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민 소득의 증가를 통한 농촌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맥락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농민 토지승포경영권, 주택용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농촌의 경영방법을 고안한다. 이와 더불어 개혁기 토지수용과 보상제도에 있어 농민들이 토지 수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한다.

- ⑤ 개방형 경제 수준의 제고: 경제의 글로벌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개방형 경제 전략과 체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개방형 경제 모델을 꾸준히 모색하고 국내외 경제 모두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제경제에서의 협조와 경쟁이 공정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수출과 수입 모두를 중시하여 무역과 산업정책의 조절을 추진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공무역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기업의 타국 진출과 국제경쟁능력 강화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자유무역의 기초 아래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국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위기 관리 능력을 증진시킨다.

18대 보고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였듯이 기존의 경제모델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발전 전략들을 수정해나간다는 목표를 재천명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가장 상식적인 정책기조 아래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중심형 경제 발전 모델로의 점진적 전환, 가공무역 중심에서 고급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고수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의 경제정책에서 변화의 기운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장쩌민과 주룽지 주도의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화의 영향이 잦아든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의 독과점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이에 따른 민영기업들의 퇴조의 기초 속에 주요 기간산업과 핵심 생산 산업에서 독과점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된 국가의 자본주의 개입 또는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국가자본과 국유 기업들의 시장과점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집권의 핵심이자 체제를 지지하는 기득권층의 특권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국유경제 부문의 지배력과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주의경제의 요소 사수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개혁의 주요 관심사였던 토지 국유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국유경제의 강화 맥락에서 민영 금융기관의 적극적 육성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일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짧지만 명료하게 강조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제 수준의 보호를 추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삼농 문제 해결방안을 다시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고, 특히 개혁기간에 문제가 된 토지수용문제와 농민의 토지 증가에 따른 공정분배에 주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당대회 보고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되었지만 경지 면적의 마지노선을 사수하고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토지와 부동산 산업의 남용 및 부패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농촌, 농업, 농민의 삼농 문제에서 개혁개방기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불안 요인인 지방, 기층 간부와 국영 및 민영 개발상들 간의 후견인-수혜자관계에 기인한 부패는 심각하다. 이에 따른 인한 농촌과 도시교외 지역의 불법적인 집체소유토지 매각과 이에 따른 개발이익의 분배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³¹ 개인 간부의 부패문제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이 여전히 해당 지역의 국유 토지 사용권 매각과 임대인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³² 또한, 2011년 후반기에 발생한 광둥성 루핑시 우칸촌의 대규모 촌민시위폭동에서 증명되었듯이 농촌, 교외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된 지난 20여 년간의 축적된 경험, 근대화된 교육수준과 법적-정치적 권리 인식, 그리고 경제 수준의 점진적 향상을 통해서 농민과 도시 교외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18대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굴러온 경제모델을 왜 바꿔야 하는가라는 인식이 느껴진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률 7~8%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정책목표도 시진핑-리커창 집권 1기(2013년~2017년)에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2기(2018년~2022년)에 들어서면 극도의 인위적 부양책이 없는 한 성장률 7%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약 35년간 10%의 연평균성장률을 달성한 경험이 있고, 이에 더하여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예상하듯 2020년까지 5%의 안정적인 성장률까지 유지한다면 이 또한 대단한 업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동시에 중국 대중들의 기대수준을 서서히 낮춰가는 여러 정책과 선전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대 격차(계층

31. Chi-yuk Choi, "Rioting in Model Village Attests to Graft Woe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7, 2011, <<http://www.scmp.com/article/981153/rioting-model-village-attests-graft-woes>> (검색일: 2012.11.27).

32. ACM van Westen, "Land in China: Struggle and Reform," *Development*, Vol. 54, No. 1 (March 2011), pp. 55~58.

간, 도농 간, 동부와 서부 간, 국영과 민영 간)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극단적인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산당 정권이 성장과 분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성장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과 분배는 동시 추진 정책 하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발전 모델이 추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동부 연안의 발전된 지역, 즉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 등의 경우 성장 기조 아래 분배를 더욱 강조하며, 중서부의 저발전 지역의 경우는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³³

3.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18대 보고에서 제시된 사회정책 부문(在改善民生和創新管理中加強社會建設)에서도 역시 기존 사회정책들의 지속이 감지되며 변화의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혁개방기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고도성장의 열매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였고 이들은 중국 공산당정권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더불어 분배가 강조된 것처럼 사회 부문 정책들에서도 이러한 소득불균형과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17대 보고와 달리 민생개선을 매우 강조하면서 다양한 민생의 이익을 증진하고 걱정들을 해결하며 인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적인 민생 문제들에 주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33.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 관계자 인터뷰, 2012년 11월 21일.

하에서 6개 부문의 정책들, 즉 인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강화, 질 좋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여건 개선,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인민건강 수준의 제고, 사회관리 및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강조로서 17대 당대회 업무 보고와는 달리 환경보호와 운영에 대한 별도의 장(大力推進生態文明建設)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 ① 인민들이 만족하는 교육: 중화민족의 발전과 사회 진보의 초석이 되는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맥락에서 교육 영역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교원과 학생들의 책임감 증진, 초·중등 9년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직업교육의 강화, 고등교육의 내실화, 평생교육체계를 완성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자원을 농촌, 빈곤지역, 소수 민족지역 등에 더 분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② 질 좋은 일자리, 고용 창출: 일자리는 민생의 근본이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고용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념이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고학력자들의 청년실업 문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민들, 도시빈민, 그리고 퇴역군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실업보험 등을 통한 실업 노동자의 보호 체계와 노사 간 분쟁 조정, 중재 및 해결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노동자의 일반적 권익을 보호·증진시킨다.
- ③ 인민들의 수입 증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수입이 동시에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을 증가와 더불어 임금이 동일하게 증가되어야 한다. 초기분

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공평하게 인민 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며 노동, 자본, 기술, 관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수익 창출에 공헌한 만큼 공평하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세금, 사회보장 등의 재분배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나갈 것이다. 특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 ④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체계의 진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분배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써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계층 간 유동성을 활발히 한다. 도시와 농촌 인민들의 사회보장체계는 기업, 당정기관, 사업단위의 사회보험의 강조와 사회복지제도, 자선사업 등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정부의 관리와 시장의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주택 문제 해결의 기초로 삼으며 빈곤층과 서민들을 위한 각종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남녀평등,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 ⑤ 인민건강수준 향상: 인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의료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며 서양의학과 중국의학의 공통 발전,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약품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개혁하고 국가의 건강정책을 개선한다. 특히,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가족계획정책(한 자녀정책)이 국가의 기본 정책임을 재확인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인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⑥ 사회관리 강화: 사회관리 제도, 인력, 정보화의 건설을 통하여 여러 기층 사회 관리를 강화하며, 또한 유동인구의 관리를 강화한다. 인민내부의 여러 모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당정의 주도하에 균중이익제도, 탄원제도,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보조 제도 등을 강화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 조정과 타협을 유도한다. 이러

한 문제들은 사회 안정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안전체계를 강화하면서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통제하고 당의 정법 부문의 영도를 강화하면서 중국특색사회건설을 이루어나간다.

- ⑦ 환경보호를 통한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와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와 보전을 통해 생태문명을 건설하여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난개발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해양개발 능력을 증진시켜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 한다. 각종 자원들의 절약을 통하여 생태보호를 추진하고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황폐화, 사막화, 토양유실, 삼림유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회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의 기초 아래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17대 보고와 달라진 점은 민생과 생태를 더욱 강조했다라는 점이며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경제적 조화라는 큰 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의 결과물 분배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여러 재분배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제시된 재분배 정책들, 즉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증대, 질 좋은 일자리의 확보와 분배, 초기분배와 재분배 강화를 통한 공평한 인민 수입의 증가, 양로보험 강화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등한 사회보장체계의 건설, 의료보건의 질적 향상, 사회조정, 탄원, 이익보장 등을 통한 사회관리 강화는 경제부문에서 제기된 삼농 문제와 노동자 소득 권리 보장, 당건설 부문에서 제기된 당정간부들의 부패 척결, 그리고 특히 처음으로 새로운 장으로 삽입된 생태문명 건설

을 통한 환경보호 및 운영과 더불어서 향후 시진핑-리커창 정권의 국내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경제정책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계층 간, 도시와 농촌 간, 동부연안과 내륙지역 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경제구조 하에서는 지속 성장이 더 중요한 상황이며 사회 안정이 극도로 위협받지 않는다면 사회 부문에서 제시한 분배정책들의 강화는 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인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빈부격차문제는 중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회 문제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인민들의 주거 문제, 즉 부동산-주택 문제이다.³⁴ 이번 18당대회에서는 빈부격차문제를 심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빈곤계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부동산 투기와 폭발직전의 거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또한, 삼농 문제 부문과 생태문명 건설 부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지나친 부동산 개발이 농경지면적의 의무 확보를 위협하지 않게 하고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토지와 부동산 산업에서의 남용과 부패 문제가 극한에 다다른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34. 관련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Yongshun Cai, "Collective Ownership or Cadre's Ownership?: The Non-Agricultural Use of Farmland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75 (September 2003), pp. 622~680; Xiaolin Guo, "Land Expropriation and Rural Conflict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66 (June 2001), pp. 422~439; Wooyeal Paik and Kihyun Lee, "I Want to Be Expropriated: The Politics of *Xiaochanquanfang* Development in Suburba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1, Issue. 74 (March 2012), pp. 261~279; Samuel P. S. Ho and George C. S. Lin, "Non-agricultural Land Use in Post Reform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76 (September 2004), pp. 758~781.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통제되었다는 분석 하에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방지와 보장성 주택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정도로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발상과 지방 정부가 이윤 창출이 극히 제한적인 보장성 주택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도시 거주 중저소득층 역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보장성 주택의 구입과 임대를 주저하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노동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강조되고 있다. 고용 창출이라는 근본적 대책은 노동자의 질적 향상과 취업에 대한 관념 변화를 기반으로 농민공, 도시빈곤층, 그리고 퇴역군인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산업에서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통하여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공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간단한 언급 외에 2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호구제도 개편과 농민공의 도시민화라는 정책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최초로 실시되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2008년 실시된 신노동계약법 등의 효과로 인하여 노동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³⁵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소득분배에서 회사 측이 노동자보다 이익 점유율이 월등한 상황이 지속 또는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35. 필자가 2007~2012년 사이에 수차례 실시한 광둥성 등관시와 선전시 및 산둥성 칭다오시 공장들의 사용자와 노동자들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통제를 받는 공회(工會)가 아닌 독립된 노동조합 건설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요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부문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로 명명된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재인식이다. 17대 보고에서는 환경보호가 산재되어서 제시되었지만, 이번 18대 보고에서는 독립된 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화는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다. 환경오염과 파괴라는 중대한 문제를 더 이상 경제발전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와 사회 운영의 핵심 요소로 정의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2010년 18만 5천 건으로 추산되는 군체성사건과 수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집단 탄원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기업과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제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³⁶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실시한 강력한 환경기준 강화, 저환경오염 산업 육성을 통한 거시적 경제구조 전환, 대기, 토지, 해양 자원의 절약과 보호 등을 지속하면서 향후 10년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중앙과 상급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보호, 복구가 철저히 실행되기 어렵다.

36. 경제발전의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에 의한 대중정치참여의 증가에 대해서는 Wooyeal Paik,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Determinants of Provincial Petition (*Xinfang*) Activism 1994-2002,"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3, No.1 (January 2012), pp. 99~120 참조. 중국의 저항적 성격의 시위에 관해서는 Xi Chen, *Social Protest and Contentious Authoritarian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4.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시진핑-리커창 중심의 차기 중국공산당 정권의 국내정치는 18대 보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책의 '지속'에 방점을 두고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변화'의 요소를 가미하는 정책적 특징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보고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차기 지도부가 직면할 국내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보시라이 사건 등으로 불거진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반부패를 특별하게 강조한 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대 이후 중국 국내언론과 민간을 중심으로 부패관료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산당의 엄벌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어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만 여론을 일정정도 잠재우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민생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혁개방에 따른 역설과 부작용(예를 들면, 도농 격차, 소득 불평등, 의료보장, 노동환경, 주거문제 등)의 해소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이미 구조적으로 만연한 중국의 부패문제를 과연 공산당이 해결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무엇보다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들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상황에서 근본적 수술 없이 겉가지 치기식의 반부패 개혁이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생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자구책들이 이미 후진타오 집권기에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상대적 박탈 문제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다. 물론, 정치적 수사로 민생 개혁이 인민들에게 듣기 좋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정책의 전환이 실시되지

않는 한 불평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민생과 분배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성장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희생은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계층, 즉 서민들에게 강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성장 역시 그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고, 중국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불가피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희생양은 개혁개방의 수혜계층이 아닌 피해계층이 될 것이다.

한편,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회복을 위한 민주화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18대 보고에서도 예상과 같이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개혁이 요원한 현실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의 수확률마저 떨어진다면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에서 수혜를 받아왔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원화과정 속에서 이익집단화 되었고,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중앙의 반부패 및 분배정책 강화에 반발 혹은 비협조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반부패 및 민생개선의 의지 표명은 선언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각종 민생시위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직까지는 부패관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이 저항의 방향이 언제 중국 공산당 핵심을 직접 겨냥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국내 정책들로 인하여 공산당 정권의 명운이 위협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가중된다면 중국의 대외적 행보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 대외정책의 균형 상실 가능성이다. 시진핑 지도부 1기는 공산당 정권 교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라는 특성상

후진타오시기의 대외전략인 평화발전론과 조화세계를 유지하면서 국내발전 및 사회안정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와 달리 시진핑 1인 카리스마의 상대적 쇠퇴, 엘리트 집단의 분절화와 다원화적 특징으로 인해 차기 지도부가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장악에 실패할 경우 엘리트 내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의 분출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일 국내적 모순이 확대되어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거세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엘리트 내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내문제의 심각성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지도부는 민심달래기 및 체제 안정을 위한 미봉책으로 중화민족주의와 공세적 혹은 대외팽창적 외교의 유혹에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³⁷

이미 18대 보고 및 시진핑의 취임연설에서도 중화민족의 부흥은 여러 차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국내위기 해결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위대하고 강한 중화민족’이라는 미명하에 강한 중국, 강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키고 인민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외행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다소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로 전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³⁸ 또한, 체제유지를 위해 공산당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외한 일시적 자유화 조치, 대표적으로 언론 자유 확대 등이 확산되면서 중국식 대중정치(일종의 포퓰리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업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민족주의 정서를 상

37. 배정호 외, 『리더십 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69.

38. 이기현,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와 신지도부의 등장: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0, 2012.11.20).

품화시키고 중국의 강대국 지향 논리가 인민들의 인기를 얻게 된다면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국내여론의 영향을 받아 균형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V. 18차 당대회의
대외·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1.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경제 발전과 군사력 발전 등을 통해 강국화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8대에서도 중국공산당은 이와 같은 기초를 강화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18대 보고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만일 이 목표가 성사되고 미국의 현 경제 성장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0년경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군사 영역에 있어 18대에서는 17대에서 “부국(富國)과 강군(強軍) 실현”을 통해 공식화하기 시작한 강군 건설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강군(强大軍隊) 건설을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로 규정하고, 장쩌민 총서기 시절의 3단계 군사력 현대화 발전 전략(三步走)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한 것이다.³⁹

강국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은 대외전략과 다양한 대외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오고 있다. 대외전략 실행수단과 방법, 대외정책의 내용은 국제구조와 대외환경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평가에 기초해 구체화되었는데, 18대 보고 중 제11번째 항목인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의 지속 촉진(繼續促進人類和平與發展的崇高事業)’은 국제 환경과 대외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39. 이 3단계 발전전략은 1997년 12월 장쩌민(江澤民)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식 제기했다. 장쩌민이 제기한 이 전략에 기초해 중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1단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2단계, 그리고 2021년부터 205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국방 및 군사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江澤民, “實現國防和軍隊現代化建設跨世紀發展的戰略目標(一九九七年十二月七日),” 『江澤民文選(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 2006), pp. 82~90.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과정에 있으며 시대의 주제는 여전히 평화와 발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문화 다양화, 사회의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명이 새로운 돌파구를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가와 개도국의 전체적인 국력이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역량 구조는 세계 평화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18대 보고는 16대, 17대 보고와 마찬가지로 국제구조와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국제체제의 다극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신흥시장국가와 개도국의 전체적인 역량이 증강”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제적인 세력 구도가 세계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보고가 기존 보고와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분석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미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서방 7개국(G7) 국가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침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비서방 신흥경제대국(브릭스 국가, BRICS)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력이 강화되는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와 국제질서 안정의 위협요인과 관련하여 18대 보고는 세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세계경제의 불안정·불확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16, 17대와 유사하게 중국은 국제정치의 패권주의(霸權主義), 강권주의(強權主義),

신간섭주의(新干涉主義)의 요인도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차원의 동란(動亂)과 함께 식량 안보, 에너지·자원 안보, 사이버/네트워크 안보와 글로벌 안보 이슈들을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의 불안정 요인, 중국이 인식하는 외부 위협 요인들 가운데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으로 풀이된다. 사실 국제정치의 패권주의, 강권주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국의 국방백서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에서 ‘패권주의,’ ‘강권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현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해왔다.⁴⁰ 이에 더해 중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아태 전략이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등 기존 동맹과 중국 주변국을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⁴¹

또한, 지역 차원의 동란에 대한 18대 보고의 언급은 2012년 ‘자스민 혁명’에 따른 이집트, 리비아 등 기존 아랍 독재정권의 전복의 여파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국 체제의 안정을 위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 경제·사회·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 증대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대 보고는 이러한 국제구조와 대외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4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2002年版, 2004年版, 2006年版, 2008年版, 2010年版(北京).

41. 吳興唐, “世界未來十年走向和我國對外戰略調整,” 巴忠傑 主編, 『未來十年國際環境與中國國家安全』(北京: 時事出版社, 2011), pp. 34~35; Kenneth Libethal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 4 (March 2012).

기초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로 국제관계의 평등/상호 신뢰·포용/상호 귀감(龜鑑)·협력 ‘쌍생(共贏, gongying)’의 정신 강화, 국제공평/정의 공동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는 국제관계 민주화, 주권존중, 안전 공동 향유, 세계평화 안정 수호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상호 귀감은 세계문명/발전 방식의 다양성 존중, 세계 각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방식에 대한 권리 존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아래와 같은 대외정책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곧 ① 평화발전의 길 견지,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정책 시종 견지, ②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③ 사리의 옳고 그름(是非曲直)에 기초한 자기 입장 결정과 정책 결정, 공도(公道)의 주도과 정의 신장(伸張), ④ 국제분쟁 문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무력 및 무력 위협 반대, 각국의 합법정권 전복 반대, 일체의 테러리즘 반대, ⑤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강권정치 반대, 중국 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 ⑥ 국제사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대국의 지휘를 발휘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과 각국의 공동 이익의 결합”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국제질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번 18대 보고의 인식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 당대회 보고에 비해 세계문명/발전 방식의 다양성 존중을 더욱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 방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각국의 합법 정권 전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중국이 민주주의 발전의 다양성을 강조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 정치체제의 합법

성 문제에 대한 타국의 간섭과 그 가능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빌미로 북한과 같은 자국의 우방국에 대한 서구의 간섭과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是非曲直)에 기초한 자기 입장 결정과 정책 결정 주장 역시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 주장은 향후 다른 국가의 내정 문제에 대한 절대적 불간섭이라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일(事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중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관련 외부의 압력에 대한 굴복 불가와 같은 국익 수호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자세는 기존의 당대회 보고와 확연히 다른 것으로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 실현 차원에서 국제사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대화틀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공공 이익과 책임지는 강대국 논리 등에 기초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대 보고는 17대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대외정책 항목인-‘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의 지속 촉진’에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당대회 보고와 유사하게 호혜/쌍생의 개방전략 견지와 남북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그리고 협상을 통한 경제무역 마찰 해소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협력기조를 읽을 수 있다.

표 V-1 역대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과 대외 정책기조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국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심화 발전, 문화다양화, 사회정보화 • 신흥시장국가와 개도국의 전체 실력 증강, 국제역량 구조 세계 평화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다극화 되돌릴수 없음, 경제글로벌화 심화 발전, 과학기술혁명 지속 심화, 글로벌 및 지역 협력 강화, 국가 간 상호 의존 심화 • 국제역량구조 세계평화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 국제질서 전반적으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 발전 추세는 세계 평화 발전에 유리. • 예측 가능한 시기내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 낮음
국제 질서 위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위기 영향 심각, 세계경제 성장 불안정/불확정 요인 증가, 세계 경제발전 불균형 심화 • 패권정치, 강권정치(強權政治), 신간섭주의 일정 정도 상승, 국부적 동란 • 식량안보, 에너지/자원안보, 네트워크안보 문제 더욱 분명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권정치, 강권정치 여전, 국부적 충돌과 분쟁 빈번 • 글로벌 경제 균형 상실 심화, 남북 격차 심화 • 전통안보위협과 비전통 안보 위협 상호 교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불합리한 낮은 국제 정치경제질서 여전 • 평화발전에 부정적 요인 증가 • 전통안보위협과 비전통 안보위협 상호 교차 • 테러리즘의 위해(危害) 상승 •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 민족·종교·경제/영토 분쟁에 의한 충돌 • 남북격차 더욱 확대 • 세계의 높은 불안정
바람 직한 국제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의 평등/상호신뢰·포용/상호 귀감·협력 쌍생의 정신 강화, 국제 공평/정의 공동 수호 • 국제관계 민주화, 주권 존중, 안전공동 향유, 세계평화 안정 수호 • 포용/상회귀감은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헌장의 취지와 원칙 존중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 준수, 국제관계에서 민주/화목/협력/쌍생정신 발양 • 정치: 상호존중/평등협상, 국제관계 민주화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리적인 국제정치 경제신질서 수립 • 정치: 상호 존중/공동 협력, 자기의지 강요하지 말아야함 • 경제: 상호촉진, 공동발전, 빈부격차 조성 차단 • 문화: 상호 귀감, 타민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p>문명/발전방식의 다양성 존중, 세계 각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방식에 대한 권리 수호를 존중하는 것임. 상호귀감, 장점을 취해 단점을 보완해 인류 문명 진보 추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상호협력, 우위 상호 보완, 균형/호혜/쌍생을 위한 경제 글로벌화 공동 추진 • 문화: 상호 귀감/구동존이(求同存異), 세계 다양성 존중 • 안보: 상호신뢰/협력강화,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 환경보호: 상호 지원/협력, 인류생존위한 공간 보호 	<p>족 문화 배척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 상호 신뢰/호혜/평등/협력의 신안보관 확립,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이 아닌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 다양한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중국 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임
<p>대외 정책 목표 및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발전의 길 시종 견지 • 독립 자주적 평화 외교 정책 시종 견지 • 사리의 옳고 그름(是非曲直)에 기초한 자기 입장 결정과 정책 결정 • 국가주권/안보/발전 이익 견결히 수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 •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과 플래시포인트 해결, 무력 및 무력 위협 반대, 각국의 합법정권 전복 반대, 일체의 테러리즘 반대 • 다양한 형식의 패권주의/강권정치 반대, 중국 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발전의 길 시종 견지 • 각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방식 존중, 다른국가 국내문제 불간섭, 자기 의지를 강용하지 않음 • 국제분쟁과 플래시포인트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 국제 및 지역안보협력 추동, 일체의 테러리즘 반대 • 군비경쟁 반대, 군사위협 하지 않을 것임 •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의 강권 정치 반대, 중국 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 정책 시종 견지, 중국외교정책의 목적은 세계 평화와 공동발전 • 세계 다양성 수호, 국제관계 민주화/발전방식의 다양화 주창. 세계에는 각종 문명과 서로다른 사회제도와 발전 방식 존재, 각국 국민은 스스로 각국의 일을 결정해야 함. 세계적 사무에 대해서는 각국이 평등하게 협상해야 함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대외 경제 정책 목표 및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호혜/쌍생의 개방전략을 앞으로도 시종일관 유지, 협력 심화를 통한 세계경제 건조/지속 가능한/균형 발전을 촉진 • 남북격차 축소 노력,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 지지 • 중국은 주요 경제체와 함께 거시경제정책 협조 강화 • 협상을 통한 경제무역 마찰 해소 • 중국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 참여, • 무역 및 투자 자유의 편리성 제고 •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호혜/쌍생의 개방전략을 앞으로도 시종일관 유지 • 통용되는 국제경제무역 규칙에 따라, 시장진입 확대, 법에 의거해 협력자 권익보호 •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능력 제고/민생 개선을 지원할 것을 지지 • 국제무역과 금융체제 개선 지지,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성 추진 • 협상을 통한 경제무역 마찰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정책 항목에 해당 내용 없음. 단 '경제건설과 경제체제 개혁(經濟建設和經濟體制改革)'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투자유치(引進來)와 해외투자(走出去)의 상호 결합 견지, 개방수준의 전면적 제고, • 상품/서비스 무역 더욱 확대 • 시장 다원화전략 실시. 외산직접투자 유치 강화, 이용 외자 수준의 제고

동시에 18대 보고는 세계경제 질서 영역에서도 중국의 발언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으로 “(세계) 주요 경제체와 함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강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구,” 그리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영역에서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 태도 표명은 자국의 경제력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가운데 글로벌경제 질서영역에서 자국의 발언권과 영향력 확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는 의지를 대외에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대외정책과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목표와 원칙 아래, 중국은 선진국/강대국, 주변국, 개도국 등 주요 대상별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강대국, 주변국, 개도국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존 당대회 보고와 마찬가지로 ‘평화공존을 위한 5개 원칙(和平共處五項原則)’을 관계 강화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⁴² 이중 강대국 관계에서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과 발전, 협력영역 확대, 차이점의 합리적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이며 건강한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또는 강대국)관계에 대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건강한’ 관계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은 이미 17대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정책기조이다. 그러나 이번 18대 보고에서는 중국이 스스로를 대국(大國)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국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주변국 정책에서 중국은 기존과 유사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을 동반자로(與鄰爲善、以鄰爲伴)(하는 방침)의 견지, 선린우호 공고, 호혜 협력 심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발전이 더욱 주변국에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당대회 보고에 비해 더욱 주변국을 의식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이 강국화 전략에 따라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해역을 자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으로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중국 위협론’이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개도국 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기존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

42. 이 ‘평화 공존 5개 원칙’은 1953년 12월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인도대표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한 것으로, 5개 원칙은 ‘주권 및 영토 완전(完整)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을 가리킨다.

도국의 권익 보호 등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7대 보고에서 중국은 “다수인 개도국과 단결 협력 강화,” “실속 있는 협력 확대,” “힘이 닿는 데까지 원조 제공,” “개도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이익 수호”를 주장했다. 반면, 이번 18대 보고에서는 “다수인 개도국과 단결 협력 강화,” “개도국의 정당한 권익 공동 수호”에 더해, “다수인 개도국의 국제 사무상의 대표성/발언권지지,” “영원히 개도국이 신뢰할 수 있는 벗이자 동반자 역할 수행”을 추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17대 보고에서 처음 선보인 “전통우의(傳統友誼) 심화”라는 표현이 이번 18대 보고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전통우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구의 삭제는 한국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대 보고는 다자기구 참여 문제에서도 중국의 정책이 일정정도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고 있다. 16대 보고와 17대 보고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다자외교와 다자기구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그동안 국제기구 내 국제적 의무, 건설적 역할 등에 무게를 두어왔다. 그러나 18대 보고는 다자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사하면서도 개도국이나 신흥경제대국의 역할 제고가 가능한 다자기체인 G20, 브릭스 기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공식적인 준동맹(quasi-alliance) 외교의 공식적인 틀인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추케 한다.

이밖에 18대 보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민간외교, 정당 및 정치단체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고는 기존과 달리 공공/인문 외교를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외교의 목적이 ‘중국의 해외의 합법적 권익 수호’와 연계돼 진행될 것이라고 명시(明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표 V-2 역대 당대회 업무보고에 나타난 주요 대상별 대외정책 방향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대상별 주요정책	기본 원칙	• 평화공존5원칙에 기초 해 모든 국가와 우호협 력 발전입장 견지	• 평화공존5원칙에 기초 해 공공이익의 합류점 확대/차이점을 합리 적으로 해결	
	강 대 국	• 선진국과 관계 개선과 발전, 협력영역 확대, 차이점의 합리적 처리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며 건강한 신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 수립	• 선진국과 전략대화 지 속 강화, 상호신뢰 증 진, 협력 심화, 차이점 의 합리적 처리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며 건강한 상호관계의 발전 촉진	• 선진국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 진 • 각국 국민의 근본이익 을 중시하며, 사회제 도와 이데올로기의 차 이로 다투지 아니함
	주 변 국	• '이웃과 화목하게, 이 웃을 동반자로(與隣爲 善, 以隣爲伴)' (하는 방침)을 견지 • 선린우호 공고화, 호 혜협력 심화 • 중국의 발전이 더욱 주 변국에 혜택이 되도록 노력	• 이웃과 화목하게, 이 웃을 동반자로 외교방 침 견지 •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 와 실속 있는 협력 강화 • 지역협력 적극 추진, 평화안정/평등/상호 신뢰/협력 쌍생의 지 역 환경 조성 위해 공 동 노력	• 이웃과 화목하게, 이 웃을 동반자로 외교방 침 견지 • 주변국과 선린우호관 계와 실속 있는 협력 강화 • 지역협력 강화, 주변국 과 교류협력 수준 제고
	개 도 국	• 다수인 개도국과 단결 협력 강화, • 개도국의 정당한 권 익 공동 수호, 다수인 개도국의 국제 사무 상의 대표성/발언권 지지 • 영원히 개도국이 신뢰 할 수 있는 벗이자 동 반자 역할 수행	• 다수인 개도국과 단결 협력 강화 • 전통우의 심화 • 실속있는 협력 확대, 힘이 닿는 데까지 원조 제공 • 개도국의 정당한 요구 와 공동이익 수호	• 제3세계와의 단결/협 력 지속 강화 • 상호 이해와 신뢰 증 진, 상부상조/상호지 지 강화 • 협력영역 확대, 협력 효과 증대 • 개도국의 정당한 권의 지지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다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사무 적극 참여 • UN/G20/SCO/BRICS 등의 적극적 역할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사무 적극참여, 상응하는 국제의무 감당, 건설적 작용, 국제질서의 공정/합리적 방향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외교 적극 참여, UN 등 국제/지역 기구 내 역할 수행

2.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18대에서 중국의 안보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군대 건설의 목표·원칙·방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18대 보고의 9번째 항목인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추진을 다그침(加快推進國防和軍隊現代化)’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영역은 특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강력한 국방력 보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역대 당대회 보고와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1997년 15대 보고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제7항목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건설(有中國特色社會主義的文化建設)’에서 국방과 군대 건설 강화를 국가 안보와 현대화 건설의 기본 보증으로 규정하면서 서도 군대는 국가경제건설에 복종하고 복무(服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쩌민은 군대가 국가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07년 17대 보고에서 후진타오는 “국방 및 군대 건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전체 구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국가안보와 발전전략의 전체적인 국면에 서서,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정

에서 부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2007년에 들어 강군 건설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7대에 이어, 이번 18대 보고는 국방력 강화를 더욱 중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상응하는 국방과 강한 군대 건설이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18대 보고는 처음으로 국방건설과 강력한 군대 건설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이 직면한 생존 안보 위협문제와 발전안보문제, 전통안보위협과 비전통안보 위협의 상호교차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에서 큰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18대 보고는 지적하고 있다. 국방 및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의미 부여와 필요성은 향후 중국이 국토 방위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 가는 동시에 군사력을 사용할 뜻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8대 보고는 국방 및 군대 건설 목표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가핵심안보 필요의 인도(引導)를 반드시 견지하면서,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의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에 따라,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함으로써, 2020년 기본적으로 기계화와 정보화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한다.” 이와 같은 건설 목표와 원칙은 16대 보고의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통일적인 계획,” 17대 보고의 “국가안보와 발전전략의 전체적인 국면”에 기초한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설 목표와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에 기초해 18대 보고는 아래와 같은 더욱 상세한 국방/군대 건설의 목표, 군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신시기 신단계

군대의 역사적 사명(新世紀新階段軍隊歷史使命, 이하 신군의 사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염두에 두면서, 신시기 적극적 방어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시대적 추세에 맞춰 군사전략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우주·네트워크 공간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평시 군사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을 마련하며, 군사투쟁 준비를 끊임없이 확대·심화하고,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 승리를 위한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한 다양화 군사임무 능력을 완성한다.”

여기서 신군의 사명은 2004년 말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진타오가 제시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중국군 건설과 운용 목표와 관련된 것이다. 후진타오는 이 회의에서 신군의 사명으로 ‘3개 제공(提供), 1개 발휘(發揮)’를 요구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당이 집정(執政)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량 보증을 제공한다,” “국가발전의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튼튼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한 전략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이 ‘3개 제공, 1개 발휘’의 역사적 사명에 근거해, 후진타오는 ‘정보전하 국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군사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능력 제고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상은 군대 건설과 군사투쟁 준비에 있어 중국군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국토방위에서 국가이익 수호로의 전략의 전환, 둘째,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우주·전자 군 일체화로의 군사역량 구조의 전환, 셋째, 실전 중시에서 전쟁역지 중시로의 전환이다.⁴³

한편,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해양/우주/네트워크

43. 薑延玉 主編, 『新中國國防和軍隊建設60年』(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9), p. 16.

공간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국방백서(中國的國防) 역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 영역의 안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정보화)의 성장을 배경으로 국가이익과 관련된 지역, 공간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안보이익은 기존의 협의의 지리적 변경에서 벗어나 앞서 언급한 해양 공간을 포함해 우주·전자 공간 등으로 확장되면서 해양 안전, 전자 공간 등의 안전에 중국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국방백서는 기존 백서에 비해 비전통안보, 해양 안보, 에너지 안보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2008년,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해양권(海洋權) 및 해양영토 분쟁, 해상운송로 문제, 해적 등을 거론하며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대되어 2008년과 2010년 국방백서에서 우주공간, 전자적 공간, 네트워크 영역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국방백서(中國的國防)는 “일부 대국들이 우주공간, 네트워크, 극지(極地) 전략을 마련하고, 전지구적 타격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 네트워크 작전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의 정귀량(鄭國梁)과 쥬자민(簡家民)은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우주기지와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 안보와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도 2009년 제네바 핵 군축 회의에서 우주공간은 인류 공통의 재산으로 우주공간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점차 우주공간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⁴

이에 따라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보호하려는 국가이익, 곧 핵심이익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물리력의 사용까지 불사하며 지켜내고, 또 다른 국가와 타협할 여지가 없는” 핵심이익을 대륙의 영토와 티베트, 신장, 대만과 같이 지리적 경계(地理邊疆, geographical frontier)로 제한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군사강국화, 해양강국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전략적 경계(戰略邊疆, strategic frontier)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⁴⁵ 구체적으로 중국은 2010년 들어 본격적으로 주변 해역인 남중국해, 황해 등을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2012년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 지역도 새롭게 자국의 전략적 핵심이익 지역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인식도 있다. 국력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경우 중국의 중장기 발전목표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글로벌 슈퍼파워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북한뿐만 아니라 전략적 해상 통로, 사이버공간, 우주공간 등도 중국의 전략적 경계 차원에서의 핵심이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44. “外交部長楊潔篪在日內瓦裁軍談判會議上的講話。”『外交部網站』, <http://www.gov.cn/gzdt/2009-08/12/content_1390250.htm>.

45. 중국의 ‘전략적 경계’ 개념에 대해서는 “解放少將：中國崛起首先需要戰略邊疆概念。”『新浪網』, 2009年11月1日, <<http://mil.news.sina.com.cn/2009-11-01/0959572138.html>>.

● 표 V-3 역대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방·건설의 목표·원칙·방향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국방/군대 건설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상응하는 국방과 강한 군대 건설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및 군대 건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전체 구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한 국방의 건설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로 국가안보/통일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중요한 보장임
국방/군대 건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이 직면한 생존 안보 위협 문제와 발전 안보 문제, 전통안보 위협과 비전통안보 위협의 상호교차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에서 큰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없음	없음
건설 원칙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핵심안보의 필요의 인도(引導)를 반드시 견지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의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에 따라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함으로써 2020년 기본적으로 기계화와 정보화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국가안보와 발전전략의 전체적인 국면에 서서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정에서 부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조 발전 방침을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초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추진

당대회 영역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지도이념 국방목표 군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마오쩌둥 군사 사상/덩샤오핑 신시기 군사건설 사상, 장쩌민의 국방/군대건설사상, 당의 신형사하 국방/군대건설상을 지도(指導)로 해, • 신시기 신계단 군대역사적 사명(新世紀新階段軍隊歷史使命)의 전면적인 이행을 염두에 두면서, 신시기 적극적 방어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시대적 추세에 맞춰 군사전략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우주/네트워크공간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평시 군사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을 마련하며, 군사투쟁 준비를 끊임없이 확대/심화하고,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 승리를 위한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한 다양화 군사임무 능력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인민이 부여한 신시기 신계단 군대역사적 사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반드시 마오쩌둥 군사사상/덩샤오핑의 신시기 군대건설사상/장쩌민의 국방군대건설을 지도로, 과학발전관을 국방과 군대 건설의 중요지도 방침으로 삼아, 신시기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군사투쟁 준비를 잘 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군대의 대응 능력과 다양화 군사임무 능력을 제고하며, 국가주권/안보/영토 완전성을 견결히 수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역량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쩌둥 군사사상/덩샤오핑의 신시기 군대건설사상을 지도로, 삼개대표(三个代表)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 적극적 방어군사전략의 방침을 관철하고 첨단기술조건하 방위작전능력을 제고한다. • 세계군사협력의 추세에 발맞춰 과학기술강군전략을 실시하고, 군대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함

3.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 18대 보고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중국은 향후 ‘글로벌 강국화’를 겨냥한 ‘지역 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국제 질서와 규범의 수용, 미국 등 강대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는 종래의 수동적인 대외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자국 정치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국내 중화민족주의에 호응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가운데 자국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과 같이 자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군사력의 간접적 사용(곧, 군사력 사용 위협)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초기까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대외정책 방침에 기초해 기존 국제 질서를 수용하는데 초점을 둔 대외정책,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국제경제 규범과 시장 규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국내 법규를 상당부분 정비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제2기에 들어서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為: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와 국제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들어 중국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 통화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국 화폐인 인민폐의 국제통화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서방 편향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들 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18대 보고가 시사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이 단독으로 변화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정책공조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비서방국가이자 신흥경제대국인 브릭스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개도국이 주축인 G20를 적극 활용하면서 국제경제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향후 국제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국제안보 영역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18대 보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형대국관계 건설’ 노력이 그러한 중국의 의지를 잘 대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기존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성장 추이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될 경우 향후 장래에 기존과는 다른 국제경제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강국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공모함 건조, 우주 군사작전 지원 시스템 구축,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발 등을 통해 장거리 군사력 투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대 보고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중국의 강군(強軍) 건설 노력은 기존의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을 자극하면서 미·중 사이의 경쟁과 긴장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상대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조건에서 양측 사이에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⁴⁶

지역 차원에서 중국은 지역 강국화 실현과 자국의 이익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적 영향력 강화 노력과 함께 군사력의 간접적 사용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경제 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면서 주변국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와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중국은 자국의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인민폐 환율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자국 경제력이 성장하고 주변국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조건에서 기존에 비해 자국 이익을 실현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이를테면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핵심이익(核心利益)’ 개념을 빈번하게 제시하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역 내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분쟁 거리는 보류해 두고 공동으로 개발하자(擱置爭議, 共同開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의 주권 실현을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국 내 민족주의 정서에 호응하기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중국이 강국화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6. 이러한 점은 2010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선언, 2011년 이후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행보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어가는 가운데 2012년 이를 일정정도 조정하기 위해 미·중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2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미·중 관계를 C2 개념 - 조정(Coordination)와 협력(Cooperation) 또는 운명 공동체(Community)를 의미 - 으로 정의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 18대에서는 안정적인이고 건강한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관계가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도 존재하는 ‘탄력적 관계(resilient relationships)’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성장 추이, 역내국가 간 경제 네트워크의 발전 추세,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해 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부작용으로 최근 주변국 등에서 중국위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상황이 가시화함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핵심이익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본, 필리핀 등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군사력 사용 위협, 경제 제재 등 강경책을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발전이 더욱 주변국에 혜택”이 되는 정책을 개발, 적용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정책을 기존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아시아 안보 네트워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 공군, 제2포병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일본 등의 반발과 견제를 불러오면서 향후 역내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Ⅵ. 정책적 고려사항

1.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당-국가체제(party-states system)가 건재한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상 18대에서 제시한 국정방향은 내년 3월의 전국인대에서 새로 구성되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되고, 당 지도부 역시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국정운영을 담당한다. 그런 점에서 18대 결과는 향후 5년간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및 북중관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18대의 정책기조는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이 변화보다는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18대에서 제시된 중국의 주요 국정방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노선, 이론체계, 기본제도)’ 하에 ‘과학적 발전관(지도이념)’에 의거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수단)’을 통한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목표)’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에서의 권력교체는 다당제 국가에서의 정권교체와 다르기 때문에 커다란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더욱이 18대를 통해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이전의 지도부와 함께 ‘안정을 통한 지속 성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방향 역시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신지도부의 구성 과정 및 결과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이 당내 파벌 간 대립과 갈등이 아닌 신·구 지도부 간 타협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합의가 최고정책결정 그룹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불완전한 세대교체(4세대→4.5세대)와 개혁지향적인 왕양과 리위안차오의 탈락으로 이어진 점 등은 중국이 단절·

변화보다 안정·지속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군사위주석을 동시에 계승한 점과 9명에서 7명으로 정치국상무위원을 축소할 점은 중국이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과정의 안정 및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안정을 중시하며 합의에 의한 과정은 중국의 대내외정책 결정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다. 즉, 업무분장과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어느 개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은 당·정·군의 핵심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영도소조를 통해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금번 신임 지도부의 한반도 방문 및 교류 경험보다 의사영도소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결정될 내년 3월의 전국 인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도 대한 세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세대 지도부에 비해 금번 신임 지도부의 풍부한 한국 및 북한 경험은 주목된다. 당 정치국원에 인문사회적 학문 배경과 국제경험이 비교적 많은 인사들이 충원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대국 역할이 이전보다 더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진핑, 리커창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의 방한 경험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권력서열 3위인 장덕장은 김일성종합대에서 수학 경험이 있는 북한통으로서 방북 경험을 보유한 리위안차오와 명젠주와 함께 북중 우호협력교류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대로 중국의 한반도정책 수립과정에서 지도부 개인의 역할과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향후 지한 혹은 친한 인사와의 소통은 한·중 간 정책 협력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내정책 방향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다. 18대의 결

과 중국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한 당내 민주와 정치개혁(부패척결),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진 및 민생복지 건설을 통한 조화사회의 달성 등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부는 향후 1~2년간 국내 정치안정 및 내수 증진과 내부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적 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위한 저비용의 안정적·평화적 지역질서의 유지·창출에 전략적 목적을 둘 것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정에 치중하려는 중국의 정책방향은 한반도에 위기와 기회의 두 측면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국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균형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치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환경산업 추진 등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협력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최저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등 분배와 복지 확충 조치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3대 무역상대국이자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안정적 부상에 유리한 바, 협상이 개시된 한·중 FTA의 체결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는 한국에 긍정적 기회의 측면이 될 것이나, 중국경제가 부상할수록 중국경제의 대한국 의존도보다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져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의 형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중일 영토분쟁 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금수 조치와 같은 경제적 카드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한국에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및 빈부 격차,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산적한 국내문제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인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경우 체제불안정 요인이 증가할 수 있고, 민생개선의 효과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중국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공산당이 대중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도록 만들 것이며 중화 민족주의를 통치에 활용하는 동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에 외부의 자극이 주어질 경우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것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및 일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교안보적 정책방향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역시 기존의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 책임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대외전략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18대 보고에서도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 하에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평화외교를 제창하고 있으며 선린우호, 동반자, 호혜협력 등의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감과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중국이 대외 팽창 및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발전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협력적 외교를 전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안정적 부상을 위해 미국 및 주변국과의 마찰·대립보다 협력이 더 중요한 바, 미국 및 주변국과 대화와 협력, 그리고 다자기구를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측면도 발견된다. 후진타오 정부와 달리 G2로서 미국과의 경쟁상황에서 출범하는 시진핑 지도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18대 보고에서 이를 예고하는 표현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안보·발전이익을 위해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을 선언한 점, 그리고 해양, 우주, 인터넷 공간의 안보가 중시된 반면, 17대 보고에 있었던 방어성 국방전략 및 군비경쟁 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 등은 시진핑 지도부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 따른 국력상승의 자신감과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위해 점차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개도국을 대표해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등한 “신형 대국관계의 건설”을 제기한 점도 그렇다.

이처럼 중국은 우호적 환경 조성의 대외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자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적 이해관계의 확대와 핵심이익의 확산이 부분적으로 투영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경쟁적 측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수·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중국 견제가 시도될 경우 중일관계도 갈등적 측면이 협력적 측면보다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한반도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며 한국의 외교안보적 부담이자 과제가 될 것이다.

18대 결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정책기조는 유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에 유리한 질서 형성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익인 안보와 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사

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남북한과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위한 외교안보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는 전통우호협력관계,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공존공영,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비핵화 등을 지지하나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당분간 한반도의 조기 통일보다 현상유지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제고에 주력해야 하는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함을 의미하는 바, 향후에도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점진적·전략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기초 하에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의 측면보다 지속적 측면이 우세할 것이다.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한체제(김정은 정권)의 유지·지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영향력 강화 등 기존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단기간에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지속되는 현 구도 하에서

47.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중국학자의 글로는 張璉瑰, “朝鮮半島의統一與中國” 『當代亞太』, 2004年 第5期, pp. 35~36; 그러나 중국 내에 일부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발견된다. 즉,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에 중요한 전략지역임에는 분명하나, 북한의 안보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채택할 경우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국제적 발언권을 일부 확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경제 실리 면에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金強一, “解決朝鮮半島問題的方法, 視角, 及路徑選擇,” 『東北亞論壇』, 2012年 第2期, pp. 47~56.

시진핑 지도부도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국인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유효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난과 탈북자문제,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등 부담스러운 북한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북한체제의 안정과 3대 세습을 지지·지원하는 행보를 보인 이유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지원하고 대북 영향력을 활용, 미·일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대부분 유지·계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화의 여지도 존재한다. 18대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대내외정책적 과제는 안정적 부상의 실현과 이에 유리한 외부환경의 조성으로 집약된다. 안정적 부상에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에는 두 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과 부상에 따라 확대·확산된 이익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국제질서의 재편이다. 이는 중국이 이전의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자국의 부상 실현에 유리한 질서 형성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점은 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북·중관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발전이 더욱 주변국에 혜택이 되도록 노력,” “사안 자체의 시비곡직에 의거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 “각국의 합법 정권 전복을 반대한다” 등 18대 보고에 새로 삽입된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봉괴정책을 반대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자국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 여하에 따라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이나 북한 변수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과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동시에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발전이익을 침해하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억제할 것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붕괴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적 제재나 한미 군사훈련 등을 중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통제·유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영향력을 비핵화와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같은 안보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의 수준도 강화될 것이며 대북 관여(engagement)정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안정적 부상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에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중국에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부상할수록 대미, 일 관계를 고려한 한국과의 관계설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시진핑 지도부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예상은 18대 직후 중국 측 우호대표단의 방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지도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자국 중심의 시장 통합질서 형성 차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안정 및 제도화를 위한 FTA 추

진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소통 확대와 신뢰증진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역사, 영토문제를 둘러싼 중·일,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핵)문제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 완화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협력도 고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 논의 및 북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협력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중 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분야에 대한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의 격화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협상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6자회담을 공전시키거나 핵 실험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거나 민족주의를 자극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요구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중 협력방안

가. 기본방향

(1)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시진핑 지도부도 한국과의 전략관계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⁴⁸ 한·중 간 이미 합의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G2로 부상한 중국이 동아시아국가들과의 해양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냉전시대의 논리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문제, 북한문제, 동아시아세력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협력증대가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 및 중·일 세력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어느 측과의 관계만을 강화해서는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우선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간 외교차관급 고위전략대화와 국방전략대화에서 북한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중국 측에 제안하는 한편,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 및 문화부문에서도 마찰이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경제전략대화와 문화전략대화를 추진하여 한·중 간 전략협력을 다원화해야 한다.⁴⁹ 아울러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틀을 가동함으로써 미·중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시진핑이 중국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후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외교안보 과제는 일본과의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서 보수성향의 아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49. 미·중은 이미 고위급대화와 경제전략대화를 전략 및 경제대화(S&ED)로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전략대화와 인권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2) 협력의 다양화 추진

앞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중 및 북·러 경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편, 한·중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체결한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남북한에 대한 정책기조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외교안보관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과는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중 협력의 중점이 경제통상 분야에 있는 반면, 안보분야 및 북한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보고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체제가 집권할 향후 10년 동안 한·중 관계에서 안보문제와 북한문제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외교안보 및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한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은 북핵 및 미사일문제 등 당면 안보이슈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안보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진핑 집권 2기에 북·중 간 동맹조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중 간 군사교류협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년부터 가동한 국방전략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중국군의 참관 허용, 한·중 해군 간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해·공군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한·중 간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⁵⁰

또한, 기후, 환경 등 신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국 18대 보고에서 중국이 ‘아름다운 중국’을 표방하면서 생태문명건설을 강조한 바, 중국에 비해 한국이 앞서있는 원자력 안전과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잠재적 갈등요인의 사전 관리

중국 18대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부분이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고 일본에서 자민당 보수우익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향후 한·중·일 3국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족주의와 배타적 애국주의 정서 고조로 인해 한·중·일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문제와 영토 및 해양경계선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분출될 수 있으며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한·중 양국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에 입각한 감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대립은 한·중 간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간 불신과 오해로 인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자제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중국이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중국의 현실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⁵⁰ 신상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12월 10일.

고려한 대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문제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간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여론이 점차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정부 및 언론의 세련된 공공외교와 문화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⁵¹ 중국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게 한국의 입장과 고민을 정확하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고 양국 간 신뢰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나. 사안별 협력방안

(1)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안정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북핵문제

⁵¹ 중국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언론매체, 인터넷, 시민사회, 국민여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Yufan Hao and Lin Su,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Hampshire: Ashgate, 2005);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를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6자회담 구도를 가장 적실성 있는 회담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핵 불용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중·러와 6자회담 재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이 보다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 간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저지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에게 북한의 로켓개발이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게 북한의 로켓 개발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역내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나로호의 경우 결코 군사적 목적을 띠지 않는 평화적 위성발사라는 점에서 북한의 로켓발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해야 하며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효과적인 압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2) 북·중경협 심화 대응

향후 중국과 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화를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경제의 개방화와 북한주민의 경제난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⁵²

52. 201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시진핑-리커창 지도부도 김정인에게 경제개

따라서 한국은 북·중경협 심화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기보다는 북·중 경제협력에 참여하여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국도 북·중 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재중 탈북자문제의 해법

김정은 체제의 등장이후 북한이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하고 중국공안 이 탈북자 단속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의 중국유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탈북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검거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재중 탈북자문제는 한·중간 핵심 갈등사인이 될 것이다. 재중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이를 국제문제화 하여 중국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방법과 비공개 외교라인을 통해 재중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설득하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해법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탈북자문제에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내 탈북자문제를 공론화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정책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은 민간단체와 언론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혁·개방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유관기관과 탈북자문제 협의를 진행하고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이 탈북자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김정은의 중국방문 대책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대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행정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 중국의 신 지도부와 접촉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방중 시에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무역관계 심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측에 김정은 방중에 관해 사전·사후 통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설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동하는 전례가 있으며 북한 지도자의 방중 시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7명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 대외연락부의 접촉채널을 가동하여 북·중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⁵³

(5) 한·중 신정부 간 신뢰구축

2013년 초 한·중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바, 한·중의 신정부 간 우호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직후 중국이 신뢰할만한 비중 있는 인사를 중국에 특사로

⁵³ 신상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12월 10일.

파견하여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 순서를 미국, 중국, 일본 순서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면 한·중 신뢰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외교적 고려는 일본의 자민당 보수정권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한·중관계 발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배정호 외. 『리더십 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상국 외.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전성흥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조영남.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서울: 창비, 2012.

_____.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서울: 나남, 2009.

Chen, Xi. *Social Protest and Contentious Authoritarian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Dickson, Bruce J.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Hao, Yufan and Lin Su.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Hampshire: Ashgate, 2005.

Wedeman, Andrew. *Double Paradox: Rapid Growth and Rising Corruption in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薑延玉 主編. 『新中國國防和軍隊建設60年』.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江澤民. 『江澤明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6.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北京: 人民出版社, 2012.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2. 논문

- ACM van Westen. "Land in China: Struggle and Reform." *Development*. Vol. 54, No.1, 2011.
- Cai, Yongshun. "Collective Ownership or Cadre's Ownership?: The Non-Agricultural Use of Farmland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75, 2003.
- Guo, Xiaolin. "Land Expropriation and Rural Conflict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73, 2001.
- Ho, Samuel P. S. and George C. S. Lin. "Non-agricultural Land Use in Post Reform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76, 2004.
- Li, Cheng. "The End of the CCP's Resilient Authoritarianism? A Tripartite Assessment of Shifting Power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211, 2012.
- Libe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 4, March 2012.
- Paik, Wooyeal and Kihyun Lee. "I Want to Be Expropriated: The Politics of Xiaochanquanfang Development in Suburba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1, No. 74, 2012.
- Paik, Wooyeal.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Determinants of Provincial Petition (Xinfang) Activism 1994-2002."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3, No. 1, 2012.
- 金强一. "解決朝鮮半島問題的方法,視角,及路徑選擇." 『東北亞論壇』. 第2期, 2012.
- 吳興唐. "世界未來十年走向和我國對外戰略調整." 巴忠倓 主編. 『未來十年國際環境與中國國家安全』. 北京: 時事出版社, 2011.
- 張璉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第5期, 2004.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北京, 2002年版, 2004年版, 2006年版, 2008年版, 2010年版.

3. 기타자료

『조선일보』.

『연합뉴스』.

『프레시안』.

『人民日報』.

『光明日報』.

『外交部網站』.

『新浪網』.

『人民網—人民日報』.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 관계자 인터뷰, 2012.11.21.

신상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12.10.

이기현.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자대회와 신지도부의 등장: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0, 2012.11.20.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斗.”
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2.11.8.

“中國家庭收入不平等報告.” 西南財經大學 中國家庭金融調查與研究中心.
習近平. “習近平十八屆一中全會講話.” 2012年 11月 15日.

江澤民. “實現國防和軍隊現代化建設跨世紀發展的戰略目標.” 1997.12.7.

<www.asean.org>.

<<http://cpc.people.com.cn/18/n/2012/1109/c350821-19529916.html>>.

<<http://news.sina.com.cn/z/zhonggongshibada>>.

<<http://cpc.people.com.cn/18/>>.

<<http://www.xinhuanet.com/18cpcnc/zb/20121108/tp.htm>>.

<<http://theory.people.com.cn/n/2012/1202/c40531-19762901.html>>.

<<http://cpc.people.com.cn/n/2012/1119/c64387-19616005.html>>.

<<http://cpc.people.com.cn/18/n/2012/1115/c350826-19590370.html>>.

<<http://news.sina.com.cn/c/2012-11-15/121225587425.shtml>>.

<<http://cpc.people.com.cn/GB/64162/351757/index.html>>.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index.html>>.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index.html>>.
<<http://theory.people.com.cn/n/2012/1029/c40531-19416706.html>>.
<<http://cpc.people.com.cn/18/n/2012/1107/c350823-1952245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1/2012110100183.html>.
<<http://www.scmp.com/article/981153/rioting-model-village-attests-graft-woes>>.
<http://www.gov.cn/gzdt/2009-08/12/content_1390250.htm>.
<<http://mil.news.sina.com.cn/2009-11-01/0959572138.html>>.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3,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외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www.kinu.or.kr

